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1945~1947)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송재경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1945~1947)

지도교수 정 용 옥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송 재 경

송 재 경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1945~1947)

송재경

본고는 1945년에서 1947년 사이 미군정의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한국의 정치동향과 사회동향을 살펴보았다.

점령 직후 미군정은 남한이 처한 여러 정치, 경제, 사회문제에 대응해야 했다. 만주·북한·일본 등과의 교역 단절로 인한 경제문제가 발생했고, 봉건적인 지주-소작제가 남아 있었다. 남한주민들은 강한 독립의지를 가지는 한편, 토지개혁 등의 개혁조치가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동시에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미군정은 남한의 정계개편에 관여했고, 여러 차례 과도정부 구상을 추진하여 차후 한반도에 수집될 정부의 핵심세력을 육성하고자 했다. 미군정의 과도정부 구상은 선거를 매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미군정의 여론조사 활동은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여론조사를 통해 어떠한 사회적 문제들이 점령의 안정성을 해칠 것인지 점검하는 한편, 미군정의 정치구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자 했다. 따라서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는 당시의 사회동향과 정치동향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 활동은 공보기구 산하의 하부부서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여론처에서 여론국으로 명칭이 변화한 여론조사 기구는 여론수집여행과 가두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여론수집여행은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시행되기 전 소수의 미군장교들이 지역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었고, 초창기 예비조사의 성격이었다. 단, 여론수집여행에서 다룬 주제들은 이후 가두조사에도 이어졌다.

이후 전국적으로 도시·도회지에 여론조사원이 고용되면서, 가두조사 방식으로 시행되는 여론조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는 질문지와 응답지를 준비하여 거리의 행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양적으로 더 많은 대상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같은 주제를 반복 시행하여 통계치가 변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두조사라는 방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여론조사 시행지역 주민을 대표할만한 표본을 추출하여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 따라서 특정계층이나 성향의 의견이 과대 대표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서울지역의 경우 좌익의 응답거부에 의해 우익의 의견이 과하게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감안해야 할 것이었다.

또 미군정은 시행주기가 서로 다른 정기 여론조사와 비정기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정기 여론조사는 특정 설문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여론의 추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생상황, 미군정 및 군정정책에 대한 만족도, 경제체제 선호도가 주된 주제였다. 비정기 여론조사의 경우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시행한 배경조사와, 중요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안조사의 두 가지가 있었다. 현안조사의 경우 미군정의 정치구상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미군정은 서울지역에 대해서는 정기 여론조사와 비정기 여론조사를 모두 시행한 반면, 지방에 대해서는 정기 여론조사만을 시행했다. 미군정의 입장에서 서울은 정치적 중심지였고,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가 시행되는 핵심지역이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점령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여론조사만 시행되었다.

미군정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동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식량위기와 그에 따른 도시지역의 불만 확산이었다. 식량위기와 그에 따른 미가의 급락은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인들이 미군정의 행정력에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군정이 서울을 정치 중심지로 중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의 식량위기는 미군정에 있어 상당한 위기였다.

두 번째는 국가주도의 경제통제와 토지개혁,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였다. 한국인들은 주요산업 또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선호했고, 정부가 다양한 방면의 경제통제를 가하는 것을 지지했다. 귀속농지와 한국인대지주농지에 대해 토지개혁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했는데, 미군정 주도의 조치에는 반대했다. 토지개혁은 미래의 한국정부가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한국인들은 노조의 정치활동에 반감을 보였으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지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노동조건은 북한의 노동법이 제시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미군정의 여론조사는 1946년 정치동향의 흐름 또한 보여주었다. 미군정은 미소공위를 기반으로 한 해결보다는 과도정부 수립구상을 계속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졌고, 여론조사로 이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을 살폈다. 서울 지역에 한정된 반응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한국인 여론의 흐름은 미군정이 원하는 방향이었다. 한국인들은 1946년 3월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미군정의 민주의원 구상을 반대했고, 오히려 미소양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을 드러냈다. 그러나 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미군정의 입법의원에는 찬성하는 방향으로 여론의 흐름이 변했고, 미소공위 결렬에 대해서도 소련 측에 책임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

서울지역의 한국인들은 입법의원의 수립에 찬성했으나, 미군정이 입법의원을 수립한 방식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성별이나 재산에 따른 제한이 없는 보통선거권이 주어지길 희망했으나, 미군정은 우익의 승리를 위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경찰과 관리의 선거개입을 묵인했

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국인들은 서울지역에서 시행된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시행하는 것을 지지했다.

주요어 : 여론, 여론조사, 미군정, 공보, 정치동향, 사회동향.

학 번 : 2010-20034

목 차

머리말	1
一. 미군정 여론조사의 시행대상과 시행방식	4
二. 정기여론조사·물가조사 시행과 사회동향	
1. 식량위기와 점령정책 만족도 여론조사의 추이	16
2. 한국인의 경제체제 선호도 조사	25
三. 비정기 여론조사 시행과 정치동향	42
맺음말	61
참고문헌	64
Abstract	67

표 목 차

<표 1> 여론수집여행의 시행시기, 지역, 참가자 목록	6
<표 2> 미군정 여론조사의 주제와 시행시기, 지역	8
<표 3> 미군정 여론조사 일람표-한국인의 경제체제 선호도 조사	26
<표 4>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 경제체제 선호도 문항과 응답률	27
<표 5> “농지의 처분과 산업, 다른 자산들의 국유화에 대한 한국인 여론조사” 가운데 농지의 처분 관련 항목들	31
<표 6> “노동에 관한 여론조사” 주요 문항과 응답률	38
<표 7> 북한 노동법 주요내용과 미군정 여론조사 결과의 비교.....	39
<표 8>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 여론조사 문항과 응답률	43

<표 9> “미소공위 공동성명 5호에 대한 대중의 반응” 여론조사 항목과 응답률	48
<표 10> “미소공위 휴회 뉴스에 대한 반응” 여론조사 항목과 응답률	50
<표 11>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 주요 항목과 응답률	53
<표 12> 민주의원·입법의원 여론조사에서 선거권 관련 항목과 응답률	58

그 립 목 차

<그림 1> 1946년 3월 말~1947년 초 서울 암시장 미가의 동향	18
<그림 2> 1946년 ‘군정에 대한 만족도’ 변화	20
<그림 3> 1946년 3월 말~9월 중순 서울 미가의 동향과 군정만족/불만족도	22
<그림 4> 1946년 미군정 식량정책 만족도 변화	24
<그림 5> 1946년 귀속농지의 처분에 대한 여론조 사	33
<그림 6> 1946년 한국인 대지주 토지의 처분에 관한 여론조사	35
<그림 7> 1946년 노조선호도 여론조사	37

머리말

점령 직후 미군정은 남한이 처한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들에 부딪혔다. 만주·북한·일본 등과 교역 단절로 인하여 경제문제가 발생했고, 봉건적 지주-소작관계가 혁파되지 않은 채 이어졌다. 남한주민들은 강한 독립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토지개혁 등의 개혁조치가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동시에 미군정은 본국의 지시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게 한반도의 정부수립 문제는 매우 중요했고, 미국의 대한정책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¹⁾ 미군정은 남한의 정계개편에 깊숙이 관여했고, 여러 차례 과도정부 구상을 마련하여 차후 한반도에 수립될 정부의 핵심세력을 육성하고자 했다. 미군정의 과도정부 구상은 선거를 매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미군정 공보기구의 여론조사 활동은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여론조사를 통해 어떠한 문제들이 점령의 안정성을 해칠 것인지 점검하는 한편, 미군정의 구상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을 확인하고자 했다. 따라서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는 당시 남한의 정치·사회동향을 포괄하는 여러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미군정 여론조사 대한 초기 연구는 개별자료를 발굴하고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²⁾ 이성근은 미군정 여론조사 보고서 가운데 한 건을 발굴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간단한 해설을 덧붙였다. 전상인은 좀 더 폭넓게 여론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당시 토지개혁, 노조,

1) 정용욱, 2003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9쪽.

2) 이성근, 1985 〈해방직후 미군정치하의 여론동향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25 한국정치학회보 ; 전상인, 1997 〈1946년경 남한 주민의 사회 의식〉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 함한희, 1998 〈미군정의 농지개혁과 한국 농민의 대응〉 《한국문화인류학》 31 한국문화인류학회.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을 재구성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동향을 이해하고자 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행과정과 미군정의 의도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가 가진 오류들까지도 기정사실화하는 한계를 가졌다. 함한희는 농지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을 다루면서, 관련된 여론조사 자료를 일부 활용했다.

이후 이어진 김보미의 연구³⁾는 미군정 공보기구와 민간 여론조사기구의 조직과 여론조사활동 전반을 개관했다. 여론조사 시행과정을 조망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졌다. 그러나 미군정이 여론조사를 시행한 목적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도 결여했다.

미군정 여론조사 자료는 당시 정치·사회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지만, 자료비판과 분석을 통해 그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군정 여론조사를 다룬 기존연구들은 두 가지를 결합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는 미군정의 여론조사 활동이 시기 별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여론조사 시행방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여론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당시 맥락과 결부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의 성격은 무엇이며,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상은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여론조사의 시행의도, 설문지 항목과 조사방식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객관적인 것이었는지 여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당시 정치·사회동향과 결부 짓는 오류를 피하고자 할 것이다. 본고는 기존연구에서 활용한 것과 동일한 자료를 이용했지만, 기존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지표와 여론조사

3) 김보미, 2012 <미군정기 여론조사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

결과들도 포함하여 당시의 정치·사회동향을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군사실문서철(RG554)의 공보기구사, 여론조사 보고서, 《여론동향(Opinion Trends)》을 주된 자료로 활용했다. 여론조사 보고서는 여론수집여행(Opinion Sampling Trip)에 관한 보고서와 가두조사 보고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들은 개별 여론조사의 시행시기, 시행방법, 항목과 응답지, 응답률을 기록했다.⁴⁾

《여론동향》 보고서는 개별 여론조사 보고서들의 내용을 엮어서 전반적인 여론의 흐름을 정리한 것이며, 1946년 3월에서 9월까지 매주 발행되었다. 이후 발행이 점차 뜸해지다가, 1947년 7월 이후 발행이 중단되었다. 《여론동향》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개별 여론조사의 대상인원이나 항목구성, 응답률 등의 정보를 매우 부분적으로 기록했다는 한계를 가졌다. 따라서 기존연구에서는 주로 개별 여론조사 보고서를 활용하고, 《여론동향》의 내용은 극히 일부분만 활용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미군정 여론조사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여론동향》에 주목했다. 《여론동향》에 나오는 여론조사 주제들과 그에 대한 언급을 분석하여 미군정 여론조사가 다루는 주제를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그 목표가 어떤 것인지 확인했다.

그 밖의 자료로는 신문이나 기타 한국인기구들이 시행한 여론조사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신문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했다. 또 《주한미군사》, 《G-2 일일보고》, 《조선경제연보 1948년판》 등의 자료도 일부 활용했다.

4) 본고는 군사실문서철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건들을 직접 찾아서 활용했으나, 대부분의 여론조사 보고서들은 자료집으로도 출간되었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미군정기 정보보고서: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一. 미군정 여론조사의 시행대상과 시행방식

미군정의 여론조사활동은 공보기구 산하 하부부서를 통해 시행되었다.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조선총독부 관방 산하의 정보과를 접수하여 공보기구를 설립했는데, 초기 명칭은 정보과(Korean Relations and Information Section, KRAI)였다.⁵⁾ 정보과는 1945년 11월 공보과(Public Information Section)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1946년 2월과 3월에 공보국(Bureau of Public Information), 공보부(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로 승격되었다. 정보과 시절 부서의 영문 명칭을 KRAI에서 I&I(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ection)로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부서를 정보계(Intelligence Sub-section)와 공보계(Information Sub-section)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정보계가 여론처(Office of Public Opinion)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여론조사활동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정보과가 공보국을 거쳐 공보부로 승격되자, 여론처 또한 여론국(Public Opinion Bureau)으로 승격되었다.

정보과 시절 여론처는 대민관계(Civilian Contact Sub-Section)와 조사계(Research Sub-Section), 정치분석계(Political Analysis Sub-Section)를 하부부서로 가지고 있었다.⁶⁾ 각 하부부서들은 정보기구 업무를 나눠서 분담했다. 정치분석계는 정치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역할을 맡았고, 《정치동향(Political Trends)》 보고서를 매주 발행했다. 조사계는 24군단 G-2와 연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당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식량, 석유, 의복 등의 생필품 가격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했다. 대민관계에서는 여론수집팀(opinion sampling teams)을 운용하여 여론을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5) 미군정 공보기구의 개편에 대해서, 《주한미군사》 3, PartIII ChapterII, 133쪽 ; 군사실문서철 Box.39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5~8쪽.

6) 여론처 하부부서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 《주한미군사》 2, PartII Chapter I, 54~55쪽.

여론처가 여론국으로 승격되면서, 하부부서가 추가되고 담당업무가 일부 조정되었다.⁷⁾ 별도의 여론조사과(Opinion Sampling Section)를 신설하여 대민관계에서 다루던 여론조사를 담당하게 했고, 대민관계과는 군정을 방문한 방문객을 담당하는 부서로 바뀌었다. 그 밖에 정치교육과(Political Education Section)와 번역과(Translation Section)가 추가되었는데, 정치교육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개념을 전파하는 업무를, 번역과는 모든 자료의 준비와 처리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미군정 공보기구의 조직 차원에서 보면, 여론조사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보수집부서에서 이뤄졌다. 여론처·여론국의 전신은 정보계였고, 부서 명칭에 ‘여론(Public Opinion)’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후에도 정보수집활동은 계속 이어졌다. 한국인 지도자와 정당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수집과 각종 물가조사를 시행하면서, 한국인들의 여론을 수집하는 활동을 나중에 추가했다.

여론처·여론국에서 시작한 최초의 여론조사 활동은 여론수집여행(Opinion Sampling Trip)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여론수집여행은 1945년 12월 중순부터 1946년 2월까지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⁸⁾ 여론수집팀은 대체로 장교2명과 사병 1명(운전자), 한국인 통역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경기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여론조사과장을 맡은 로빈슨 중위(Richad D. Robinson)가 여론수집여행에 자주 참여했고, 그밖에 여론처장을 맡은 모내건 소령(Walter E. Monagan, Jr.)이 간혹 참

7) 여론국 하부부서의 구성과 업무에 관해서, 군사실문서철 Box.39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10쪽.

8) 현재 남아 있는 여론수집여행 보고서들을 통해 추정한 것이다. 여론수집여행 보고서는 총6건이 남아 있으며, 군사실문서철 Box.33, Box.34에서 찾을 수 있다. 본고에서 참고한 여론수집여행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①“Reports of public opinion sampling trip taken on 16 December 1945 by officers of the Office of Public Opinion” ②“Report of opinion sampling trip taken on 22 December 1945 by officers of the Office of Public Opinion” ③“Public opinion sampling trip taken on 30 December 1945 by members of the Research Section, Office of Public Opinion” ④“Report in public opinion sampling trip to Tong-uchon-ni, Pochon, and Yongp’yon” ⑤“Report on public opinion sampling trip to Suwon” ⑥“Public Opinion Sampling trip into the KAESONG area” 그 밖에 지방에 여론조사원을 고용하기 위해 여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기록한 여행보고서가 2건이 있다.

여했다.

표 1 여론수집여행의 시행시기, 지역, 참가자 목록

시행일	시행장소	참가자
1945.12.16.	안양, 수원	모내건 소령, 로빈슨 중위, 통역, 운전사
1945.12.22.	서울-개성 고속도로, 파주-고양군 경계	모내건, 로빈슨, 사병, 통역
1945.12.30.	서울 서쪽	필립스 중위, 로빈슨, 사병, 통역
1946.1.3.~4.	동두천리, 포천, 영평	로빈슨과 미군정의 다른 부서 장교2명
1946.2.10.	수원	모내건, 로빈슨, 통역
1946.2.23.	개성	덱스(Jack A. Dabbs)중위, 로빈슨

여론수집여행은 목표지역을 차량으로 돌면서, 만나는 현지주민들과 인터뷰를 하여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사전에 질문지와 응답지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전반적인 주제만 설정하고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거리에서 만나는 주민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인터뷰를 했고, 때로는 군정중대 파견대나 경찰에게 현지상황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여론수집여행에서 여론처 장교들이 질문한 주제 범위는 ① 민생 ② 공보 ③ 대미인식(민주주의 인식) ④ 정치지도자 ⑤ 대북정보 ⑥ 군정정책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민생이었다. 식량과 빨감이 부족하진 않은지, 농사상황은 어떤지, 식량과 의복 등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마을에 의사는 존재하는지 등 지역주민이 어떤 부분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지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다양하게 이뤄졌다.

인터뷰는 대부분 민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뤄졌고, 그 밖의 주제들은 한두 가지 질문으로 주어졌다. 공보에 관한 질문들은 주민들이 어떠한 매체(신문, 라디오)를 접하고 있는지, 군정이 발행하는 《농민주보》나 《주간 다이제스트》를 본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대미인식은 미국이나 민주

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고, 정치지도자는 한국인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를 물었다. 대북정보는 서울 북쪽인 동두천리 등을 방문했을 때에만 군정중대를 통해서 수집했다.⁹⁾ 군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쌀의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여론수집여행은 극히 일부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여론조사라고 볼 수는 없었다.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전, 예비조사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여론수집여행이 다른 주제들은 이후의 여론조사에서도 이어졌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이하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론수집여행의 주제들은 이후 정기 여론조사에 포함되었다.

1946년 2월 공보과가 공보국으로 승격되고, 이에 따라 여론처가 여론국으로 승격되면서 여론국의 활동도 보다 확대되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에서 한국인 여론조사원들을 고용했고,¹⁰⁾ 이들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초기단계 활동이었던 여론수집여행이 중단되고, 대신 가두조사(街頭調査) 방식의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인 여론조사원들을 활용한 정보수집활동이 때로 수행되기도 했다.¹¹⁾

여론조사원의 고용은 여론국의 로빈슨이 직접 지방을 돌면서 이뤄졌다. 로빈슨은 1946년 3월 22일에서 27일 사이 강원도의 춘천, 원주, 강릉, 삼척과 경상북도의 영덕, 포항, 경주, 대구, 상주를 방문했다. 또 1946년 12월 4일에서 6일 사이에는 제주도를 방문하여 여론조사원을 고용하고자 했

9) 군사실문서철 Box.33 “Report in public opinion sampling trip to Tong-duchon-ni, Pochon, and Yongp’yon”

10) 군사실문서철 Box.29 “Report of Conditions in Kangwon-Do and Kyongsang-pukto”, Box.44 “Report of trip to the Province of CHEJU during the period 4-6 December 1946”

11) 여론국은 주요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인 여론조사원을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예컨대 1946년 4월 초 배급을 요구하는 시위가 서울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여론조사원들을 통해 시위 전개과정을 파악했고, 4월 중순 서울의 여러 학교에서 동맹휴학이 발생했을 때는 시내 각 학교에 여론조사원들을 파견하여 동맹휴학 발발의 원인과 발생여부, 발생가능성을 점검했다. 여론국이 정보기구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군사실문서철 Box.44. “Coverage of demonstration in front of the City Hall on 1 April 1946.”(1946.4.1.), Box.36 “Student strikes”(1946.4.11.)

다. 이 여행은 여론조사원 고용을 목적으로 했지만, 정보수집도 병행했다. 현지의 군정중대, 한국인관리, 저명한 한국인 인사, 경찰관리들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정치성향, 식량상황, 귀속농지 판매에 대한 여론, 공보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대규모로 한국인 여론조사원을 고용함으로써, 미군정은 여론수집여행보다 체계적이고, 양적으로 발전한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여론수집여행이 대강의 주제만 설정하고 지역주민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었다면, 가두조사는 미리 준비된 설문에 응답을 받는 방식이었다. 또 여론수집여행이 소수의 지역주민을 접촉하는 것에 그쳤던 반면, 여론조사원을 동원한 가두조사는 수백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계치를 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특정주제의 경우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반복함으로써 통계치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론조사원의 고용은 서울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그 밖에 지방에서는 도시·도회지를 중심으로 일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²⁾ 애초에 로빈슨이 방문한 지역도 춘천, 삼척, 대구, 경주 등 각 지역의 주요 도시였고, 농촌지역을 방문한 기록은 없었다. 주요도시에 여론조사원이 상주하면서, 농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필요할 경우 부분적으로 주변지역에서 가두조사를 시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정은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여론조사원을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에 대해 여론조사 시행을 다르게 했다. 서울지역에서는 정치 여론조사를 비롯하여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를 시행했던 반면, 지방에서는 제한적인 여론조사만 시행했다.

표 2 미군정 여론조사의 주제와 시행시기, 지역

시행주기	시행시기	지역/응답인원	여론조사 주제
------	------	---------	---------

12) 여론조사원의 서울 집중은 각종 여론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응답인원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큰 규모의 여론조사는 거의 서울에 집중되었다.

정기	1946.2월~3월	전국/미기재	고용의 증감
	1946.2월~3월	전국/미기재	파업의 위협성
	1946.2월~3월	전국/미기재	산업활동의 증감
	1946.2월~3월	전국/미기재	식량의 증감(가격 포함)
	1946.2월~3월	전국/미기재	연료의 증감(가격 포함)
	1946.2월~3월	전국/미기재	의복의 증감(가격 포함)
	1946.2월~3월	전국/미기재	범죄율의 증감
	1946.2월~3월	전국/미기재	화폐가치
	1946.2월~3월	전국/미기재	무역의 증감
	1946.3월~9월	전국/일부기재	귀속농지 처분
	1946.3월~9월	전국/미기재	한국인지주 농지 처분
	1946.3월~1947.3월	전국/미기재	집단농장(농지국유화)
	1946.3월~1947.3월	전국/미기재	산업국유화
	1946.3월~9월	전국/미기재	노조 선호도
	1946.2월~9월	전국/미기재	군정에 대한 만족도
	1946.3월~9월	전국/미기재	군정 한국인 관리에 대한 만족도
	1946.3월~9월	전국/미기재	학교 만족도
	1946.3월~9월	전국/미기재	광산과 산업운영 만족도
	1946.3월~9월	전국/미기재	교통시설 만족도
	1946.3월~9월	전국/미기재	통신시설 만족도
	1946.3월~11월	전국/미기재	의약품 및 의료시설 만족도
	1946.5월~9월	전국/미기재	미군정의 식량정책 만족도
	1946.3월~9월	전국/미기재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인가
1946.2월~9월	전국/미기재	매체(신문, 라디오) 우호도	
1946.2월~11월	전국/미기재	미군병사 우호도	
1946.3월~9월	전국/미기재	농민주보와 주간 다이제스트 우호도	
비 정기 (배경)	1946.4.4	서울/3063명	서울에서 교육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학생과 교사들 조사
	1946.5.27	서울/964명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대중적 태도
	1946.6.20.~21	서울/580명	한국인과 중국인 피난민들
비 정기 (현안)	1946.2.21	서울/146명	군정법령 55호에 대한 서울의 여론 샘플링
	1946.3.5~11	서울, 경기도	농지의 처분과 산업, 다른 자산들의

	/2647명	국유화에 대한 한국인 여론조사(추후 정기 여론조사 주제가 됨)
1946.3.14~15	서울/460명	미소공위 회의의 연기에 대한 서울의 여론조사
1946.3.16~21, 22~29	서울/4177명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민주의원 수립과 연관)
1946.4.1	서울/457명	서울에서 기아
1946.4월 초	서울/640명	쌀의 최고가격제에 대한 서울의 여론
1946.4.5	서울/640명	서울에서 군정의 인기
1946.4.8	서울/406명	서울 암시장에서 쌀가격 하락
1946.4.11	서울/398명	서울에서 일본, 소련 선전의 효율성
1946.4.19~20	서울/332명	미소공위에서 발표한 공동성명 5호에 대한 대중의 반응
1946.5.9	서울/376명	미소공위 휴회 뉴스에 대한 반응
1946.5.10~11	서울/846명	미소공위 휴회 뉴스에 대한 반응
1946.5.1.~14	전국/738명	농지의 처분에 대한 한국인 여론
1946.5.15	서울/387명	사회민주당의 설립에 대한 여론조사
1946.5월 중순	전국/651명	서울과 지방에서 일본, 소련 선전의 효율성
1946.5월 중순	서울, 문산, 인천/3486명	농지의 처분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여론
1946.5.29	서울/678명	물가 수준과 가격통제
1946.5.25~31	전국/1438명	농지의 처분
1946.7월	서울/8476명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좌우합작, 입법의원 구상과 연관)
1946.9.17.~30	서울/3288명	노동에 관한 여론조사

출처: 정기 여론조사는 《여론동향》 4호(1946년 3월 25일자)부터 33호(1947년 7월 5일자) 내용을 정리. 비정기 여론조사는 개별여론조사보고서 정리.

표2는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를 시행주기, 시행시기, 시행지역 및 응답인원, 주제별로 나누어 분류하고 목록화한 것이다.¹³⁾ 시행주기는 반복시행의 여부에 따라 정기/비정기로 나누었고, 또 비정기 여론조사는 그 목

13) 현재 남아 있는 《여론동향》과 개별 여론조사 자료들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다. 《여론동향》에서 모든 개별 여론조사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므로, 누락된 여론조사 주제들이 있을 수 있다.

적에 따라 배경조사와 현안조사로 분류했다. 한국인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들은 배경조사로 분류했고, 당시 이슈들과 연관된 여론조사들은 현안조사로 파악했다.

기본적으로 정기 여론조사는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기 여론조사의 설문내용은 비교적 단순했고, 선택지도 간단한 편이었다. 정기 여론조사의 주제들은 대개 그렇다/아니다/모르겠다의 세 가지로만 답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예컨대 1946년 2월에서 3월 사이 초기에 시행된 고용·산업활동·식량·의복의 증감에 대해서, 응답자는 증가하고 있다/감소하고 있다/모르겠다의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만 고르면 되었다. 각종 만족도나 선호도를 묻는 주제들도 마찬가지였다.¹⁴⁾ 단순한 선택지로 여론조사를 반복함으로써, 여론의 변화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반면 비정기 여론조사는 응답항목이 여러 개로 구성되었고, 일회성으로 시행되었다. 주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비정기 여론조사는 대부분 특정한 사건이나 미군정의 정치구상과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 수나 응답항목의 수는 여론조사마다 제각각이었는데, 미군정이 중요시한 여론조사일수록 더 많은 수의 인원으로 대상으로 시행하고, 응답항목도 더 세분화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여러 조사들 가운데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민주의원 관련)이나 “농지의 처분”(토지개혁 관련),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입법의원 설치 관련) 여론조사 등은 미군정이 가장 비중을 둔 여론조사들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기 여론조사와 비정기 여론조사의 시행지역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기 여론조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반면, 비정기 여론조사는 서울과 주변 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서울과 지방의 여론조사 시행이 달랐다는 것은 미군정이 서울과 지방을

14) 예외적인 것은 ‘귀속농지·한국인대지주농지의 처분’과 ‘산업국유화’였는데, 이 주제들도 선택지는 네 개였다. 농지의 처분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정이 판매/미군정이 분배/미래의 한국정부가 해결/모르겠다의 네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고, 산업국유화는 전부 국유화/대규모 산업만 국유화/국유화 반대/모르겠다의 네 가지 응답을 할 수 있었다.

구분하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여겨져,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곳이었다. 특히 미군정은 모든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서울의 여론만 조사했다.

반대로 지방의 경우 도시·도회지를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시행되었고, 그것도 정기 여론조사에만 국한되었다. 정기 여론조사의 주제들은 민생상황(식량, 물가 등), 경제체제 선호도(산업국유화, 토지개혁 등), 만족도(교통, 통신, 의료, 학교, 식량정책 등)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제체제 선호도를 제외하면, ‘불만’을 통제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주제들이었다.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불만이 존재하고, 또 그 불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였다. 따라서 지방에서 시행된 정기 여론조사는 국가정책이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것보다, 점령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서울지역 위주의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는 점은 당시 여론조사의 응답인원 규모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귀속농지의 처분’ 여론조사의 경우 전국단위와 서울·경기 지역에서 시행한 보고서가 모두 남아있어, 응답인원 규모를 비교해볼 수 있다. ‘귀속농지의 처분’ 여론조사는 1946년 3월 12일자 보고서(서울·경기)와 같은 해 5월 15일자 보고서(전국), 5월 23일자 보고서(서울·경기), 6월 4일자 보고서(전국)의 총 네 편이 남아 있다.¹⁶⁾ 이 가운데 서울·경기권의 여론조사 2건은 각각 2647명, 3486명으로 대규모 시행되었다. 반면 전국을 대상으로 한 2건의 응답인원은 738명(농업인구492명, 비농업246명)과 1438명(농촌1069명, 도시369명)으로 상대적으로

15) 유일한 예외는 ‘귀속농지의 처분’ 여론조사였다. 미군정은 실제 귀속농지를 불하할 것을 고려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 여론조사는 국가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것이었다.

16) 군사실문서철 Box.19 “Survey of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s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y and other properties”(1946.3.12.) ;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s”(1946.5.15.) ; “Public opinion in Kyonggi-do relative to the disposition of farmlands”(1946.5.23.) ; “Disposal of Farmlands”(1946.6.4.)

적었다.¹⁷⁾

이처럼 미군정이 시행한 가두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는 그 대상이 서울과 지방도시·도회지에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미군정 여론조사는 그 대상에도 제한적이었지만, 가두조사라는 방식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가두조사라는 방식으로는 온전한 여론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군정이 사용한 가두조사는 임의로 길거리의 행인을 선택하여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임의표본추출법(Haphazard Sampling)이라고 정의하는 방식이다.¹⁸⁾ 그런데 이 방식은 여론조사가 행해진 길거리 행인의 여론을 조사했다고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반드시 서울주민이나 남한주민의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예컨대 특정시기 서울의 길거리 행인들이 서울주민들을 대표할만한 성별, 나이, 정치성향, 직업 등의 요소를 대표한다고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¹⁹⁾

무엇보다도 가두조사의 맹점은 특정한 정치성향의 행인들이 조사에 응답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미군정이 시행한 대규모 여론조사 가운데 하나는 상당한 응답거부를 당했다. 미군정이 1946년 7월 시행한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Type and Structure of a Future Korean Government)” 여론조사²⁰⁾는 거리의 행인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

17) 그 밖에도 현재 남아 있는 여론조사 가운데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여론조사들은 대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예컨대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 여론조사(4177명),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8476명)는 남아 있는 자료 가운데 가장 응답인원이 많은 것들로, 오직 서울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군사실문서철 Box.34 “Statistical analysis of political trends in Seoul”(1946.3.31.) ; “Type and Structure of a Future Korean Government”(신복룡 편, 1993 《한국분단사 자료집》 6 원주문화사, 7~42쪽.)

18) 임의표본추출은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전화번호부에서 임의로 번호를 선택하는 것처럼 상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으로 얻은 의견은 전체집단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서울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 이것이 남한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프랭크 뉴포트, 2004 《여론조사》 휴먼비즈니스, 213~214쪽.

19) 서울주민의 여론을 살펴보려면, 표본추출부터 과학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었다. 가두조사에 응한 표본이 서울주민의 성별과 나이, 정치성향, 직업 등의 구성 비율과 최대한 유사해야 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가두조사를 시행하면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고, 응답을 기입하면 수거하는 식으로 시행되었다. 그런데 배포된 총 10000장의 설문지 가운데 제대로 응답이 기입되어 수거된 것은 8476장뿐이었다. 약 40장 가량은 좌익의 구호만 적힌 채로 수거되었고, 나머지는 사라졌다.²¹⁾ 1524명이 응답거부를 한 셈이었다.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의 사례를 보면, 서울지역의 좌익성향 주민들이 미군정의 여론조사에 응답을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²²⁾ 좌익신문인 《해방일보》 측에서 미군정 여론조사의 시행방식과 신뢰도에 의문을 표시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는 점에서도, 미군정 여론조사에 대한 좌익의 거부감이 어느 정도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방일보》는 기사를 통해 “귀속농지의 처분” 여론조사 시행과정에서 미군정 측 여론조사원이 ‘유상분배’쪽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²³⁾

따라서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 그 중에도 정치적 이슈를 다룬 각종 비정기 여론조사의 결과는 우익 측의 의견이 과다하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룰 필요가 있다. 서울 지역의 여론조사들은 전반적으로 우익 성향이 강한 결과를 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당시 서울의 여론이 우익 성향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²⁴⁾

이상에서 미군정의 여론조사 시행대상과 방식을 검토했다. 미군정의 여

20) 원문은 신복룡 편, 1993 《한국분단사 자료집》 6 원주문화사, 7~42쪽. 이 여론조사의 1번에서 7번 항목의 질문과 응답률은 동아일보에도 실렸다.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은 응답률이 약간 틀린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자.

21) 미군정의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지에 적힌 좌익의 구호는 “군정을 타도하라. 민전은 일어서라.”였다.

22)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는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답거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여론조사들은 모두 설문조사원이 설문지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했고, 미군정은 응답을 거부한 인원의 수를 집계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23) 《해방일보》 1946년 3월 15일자. 해방일보 기자의 목격에 따르면, 여론조사원은 “우리가 일본인의 토지를 무상 몰수하였는데 이것으로 자작농을 창정하는 것이 좋겠소?”라고 군중들에게 질문하여 유상분배(자작농 창정)쪽으로 응답을 유도했다고 한다. 실제 항목은 자작농/무상분배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여론조사원이 무상분배 쪽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 1946년 3월 미군정 여론국의 한 보고서에서는 서울을 “우익의 보루”라고 표현했다. 군사실문서철 Box.34 “Status of Public Opinion”(1946.3.31.)

론조사 시행방식은 가두조사였으며, 다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또 미군정은 서울과 지방을 분리하여 여론조사 시행을 달리 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를 시행했으며, 특히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대규모 비정기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도시·도회지를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점령의 안정성과 연관된 정기 여론조사만 시행되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미군정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二. 정기여론조사·물가조사 시행과 사회동향

1. 식량위기와 점령정책 만족도 여론조사의 추이

1장에서 살펴봤듯이, 미군정은 민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여론수집여행 시행 때부터 식량과 기타 물가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가두조사 방식의 여론조사가 시행되면서, 미군정은 본격적으로 미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미군정은 ‘불만도’의 추이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점령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군정이 시행한 정기 여론조사들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항목 구성은 전반적으로 단순했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위한 것들이었다. 또 정치적 이슈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바뀔 여지가 없었다. 정치 여론조사와는 달리, 좌익이 굳이 여론조사에 불응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미군정의 정기 여론조사들이 보여주는 지표들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이 시행한 정기여론조사 가운데, 핵심적인 지표 중 하나는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였다.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추상적이고 종합적인 ‘지지도’ 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통신시설, 학교, 식량정책 등의 다른 만족도 조사의 결과들을 포함하여, 미군정의 정책과 특정사안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요소들이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²⁵⁾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는 곧 미군정의 점령이 무난하게 이뤄지고 있는

25)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를 제외한 나머지 만족도 조사는 어떤 요인들이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였고, 최초의 《여론동향》부터 거의 매주 꾸준히 조사되었다.²⁶⁾

당시 미군정이 조사한 각종 지표 가운데,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가였다. 오히려 통신시설, 학교, 의료시설, 광산·산업의 운영 등 다른 만족도 조사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갖지 못했다.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가 시기 별로 상당한 등락을 보인 반면, 다른 만족도 조사들은 일관되게 높은 불만도를 드러냈다. 한국인들이 미군정이 운영하는 의료나 산업, 학교, 통신 등의 여러 요인에 불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미군정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량문제가 말로 가장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였으며, 더 중요한 문제였다.²⁷⁾

미군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미가지표였다.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의 추이와 미가지표의 추이를 상호 비교할 때, 둘 사이 일정한 상관관계를 찾아낼 수 있다. 1946년 미가의 급격한 상승세는 식량위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고, 식량위기는 곧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쳤다.

26) 《여론동향》 0호(1946.2.23.)부터 27호(1946.9.17.)까지,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거의 매주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것은 11호(1946.5.15.)뿐이다. 단, 자세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간단한 문장으로 처리한 경우는 있다.

27) 《여론동향》에서 의료시설, 광산·산업의 운영, 학교, 교통시설, 통신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자세한 수치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만족도의 증감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따라서 별다른 의미부여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반면 식량문제는 더 비중 있게 다뤄졌으며, 특히 식량위기가 정점이었던 4월 초와 7월 초에는 식량상황을 더 자세하게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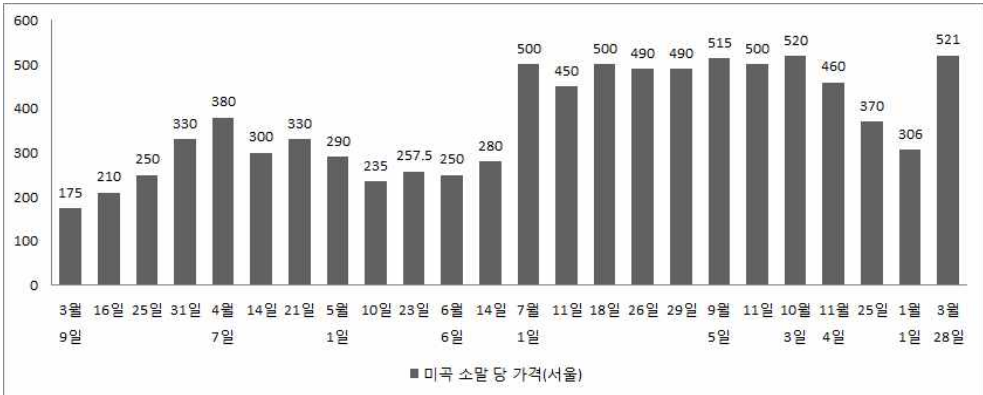


그림 1. 1946년 3월 말~1947년 초 서울 암시장 미가의 동향

출처: 《특별 서울부록》 46년 3월 9일자, 46년 3월 16일자 ; 《여론동향》 5, 6, 7, 8, 9, 10, 12, 14, 15, 17, 18, 19, 20, 24, 25, 26, 28, 29, 30, 31, 32호.

그림1은 미군정이 파악한 서울의 암시장 미가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것이다.²⁸⁾ 간혹 미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고 작성했다. 정확한 하나의 미가를 제시하지 않고 510에서 520원이라는 식으로 미가의 범위를 보고한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 경우 두 값의 평균을 계산해서 넣었다. 실제 미군정이 파악한 암시장 미가는 서울 내에서도 시장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나타냈다. 예컨대 1946년 4월 9일 여론조사과에서 확인한 암시장 미가는 신설정(신설동) 250원, 청량리 270원, 종로4가 310원, 동대문시장 350원 등 서울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드러냈다.²⁹⁾

그림1을 보면, 서울의 미가는 1946년 3월 초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여, 4월 초에 380원까지 오른 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³⁰⁾ 이후 5월에서

28) 미군정은 서울 이외에도 부산, 삼척, 보성, 춘천 등 주요 도시와 도회지의 미가도 조사하여 《여론동향》에 언급했다. 《여론동향》 30호(1946.11.25.)에서는 27개 도시의 평균 미가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최대 27개 도시까지 미가를 조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론동향》은 주로 서울의 미가를 꾸준히 언급하고, 다른 지역의 미가는 몇 차례 일부만 언급되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그림1에서는 서울의 미가만 통계처리할 수 있었다.

29) 군사실문서철 Box.33 “Price of rice in the Seoul blackmarket”

30) 미가 자체는 이미 1945년 말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연구 인용]

6월 사이 미가는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였지만, 7월 초에 다시 500원으로 급등했다. 그 후 1947년 초까지 대체로 500원 내외의 높은 가격이 유지되었다. 3월에서 4월 사이의 급등은 미군정의 식량정책이 자유시장에서 통제·배급으로 바뀌면서 일어난 부작용이었다.³¹⁾ 7월 초의 급등은 홍수와 그에 따른 수송의 불안이 크게 작용했는데 그 이후로도 미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한 것은 미곡 자체의 부족 때문이었다.³²⁾

미가가 급등하자 식량은 남한 주민들의 최대관심사로 부상하기 시작했다.³³⁾ 1946년 3월 25일에 작성된 《여론동향》 4호의 보고에 따르면 가장 큰 화제는 미소공위 문제였고, 그 밖에 식량문제, 북한 토지개혁, 남한의 귀속농지분배, 이승만의 민주의원 사퇴가 주요 화제였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화제는 식량문제에 집중되었다.³⁴⁾ 미소공위나 독립은 부차적인 관심사로 밀린 것이었다. 대신 아사 사건이 보고되었고, 아사에 관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³⁵⁾

동시에 미군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식량위기가 점차 고조되던 3월 중순부터 사람들은 조선총독부가 시행했던 식량배급을 재개해 주기를 요청했다.³⁶⁾ 나아가 3월 말에는 미군정이 명확한 배급계획이 없기

31) 미군정은 1946년 1월 25일 법령 제45호 <미곡수집령>을 공포하여, 미곡수집·배급정책을 다시 도입하고, 모든 지역에서 미곡의 이동을 통제했다. 미곡수집을 피해 다른 지역에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농촌에서 도시로 흘러가는 미곡의 움직임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도시의 식량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32) 미군정기의 통계작성은 부정확했기 때문에, 미곡의 부족이 미곡 생산량 부족 때문에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미군정의 통계상으로는 당시 미곡 생산량 자체가 부족했다. 그러나 최영목은 당시 지방관리들이 쌀의 산출량은 적게 잡고, 배급량은 많이 잡는 폐단이 있었으며, 따라서 미군정 통계가 과다하게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부미선은 상당수의 미곡이 일본으로 밀반출되었기 때문에 미곡의 부족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했고, 최봉대는 대일 밀반출과 함께 지주·모리배의 매점매석이 식량위기를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보았다. 미곡생산량 자체의 부족이든, 대일 밀반출과 매점매석의 효과이든, 당시 도시지역에서 미곡이 부족했던 것은 확실하다.

33) 그림1은 서울 지역의 미가만을 드러냈지만, 서울 지역의 미가 등락은 남한 전체 미가의 등락을 일정 정도 대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 지역에 식량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들 또한 식량문제들이 보고되었다.

34) 《여론동향》 5호(1946.3.31.)

35) Ibid. ; 군사실문서철 Box.33 “Starvation in Seoul”(1946.4.2.) 서울지역에서 457명에게 설문한 결과, 아사 6건이 보고되었다.

36) 《여론동향》 3호(1946.3.16.)

때문에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군정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식량문제를 그 이유로 들었다.³⁷⁾ 여론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중은 굶주림에 대해 군정을 비난하고 있었다.³⁸⁾ 대중들은 “군정이 독점적인 권력을 가졌고, 독점적인 능력을 가졌으며, 사람들을 먹일 독점적인 책임을 가졌다고”³⁹⁾ 보았다. 4월 초 본격적인 식량위기가 시작되자, 식량부족이 남한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화제로 떠올랐다.⁴⁰⁾ 동시에 대다수 사람들은 식량부족이 전적으로 군정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군정의 모든 활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⁴¹⁾

식량문제로 인해 군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는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 수치에 영향을 주었다. 미군정 만족도의 증감을 시기 별로 정리하면, 식량위기와 일정한 상관성을 가졌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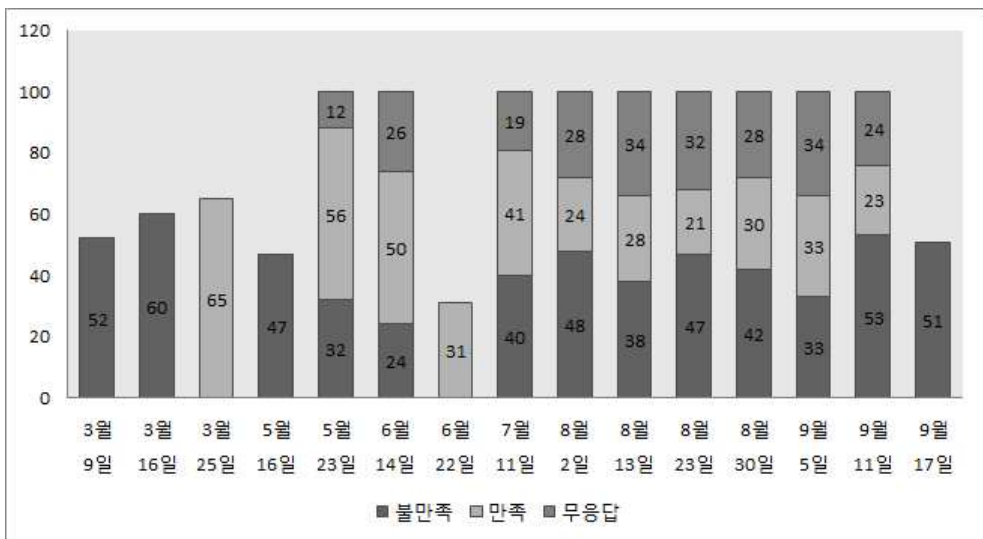


그림 2. 1946년 ‘군정에 대한 만족도’ 변화

출처: 《여론동향》 3, 4, 12, 15, 16, 18, 21, 22, 23, 24, 25, 26, 27호

37) 《여론동향》 4호(1946.3.25.)

38) 군사실문서철 Box.34 “Status of Public Opinion”(1946.3.31.)

39) Ibid.

40) 《여론동향》 6호(1946.4.7.)

41) Ibid.

그림2는 《여론동향》에서 언급된 미군정에 대한 만족/불만족/무응답의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⁴²⁾ 만족이나 불만족 한 쪽의 수치만을 제시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좋음(generally good)’이나 ‘비판적(critical)’이라는 식으로 언급한 경우들도 몇 건 있었다.

3월 25일의 예외적 수치만 제외하고, 5월 중순까지 군정에 대한 불만이 50% 전후로 높게 형성된 것이 눈에 띈다.⁴³⁾ 이후 미가가 다소 낮은 상태로 유지되던 5월에서 6월 중반까지는 일시적으로 군정에 만족하는 수치가 50%가 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6월 말~7월 초의 홍수피해로 인해 미가가 500원대를 오르내리게 되면서, 군정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낮은 상태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미가지표의 추이와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 수치를 동시에 비교하면 둘의 상관성은 더 명확해진다. 다음 그림은 두 수치를 같이 표기한 것이다.

42) 서울과 지방을 분리해서 각각의 수치를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서울의 수치를 넣었다. 서울과 지방의 수치에 큰 차이는 없으므로,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3월 9일과 3월 16일의 수치는 도시지역의 불만족도를 넣은 것이다. 농촌지역에서는 만족이 각각 60%와 55%였다.

43) 3월 25일에는 유독 만족이 65%로 높게 나왔지만, 불만을 선택한 경우는 그 이유를 식량문제와 미군정의 복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들었다. 《여론동향》 4호(1946.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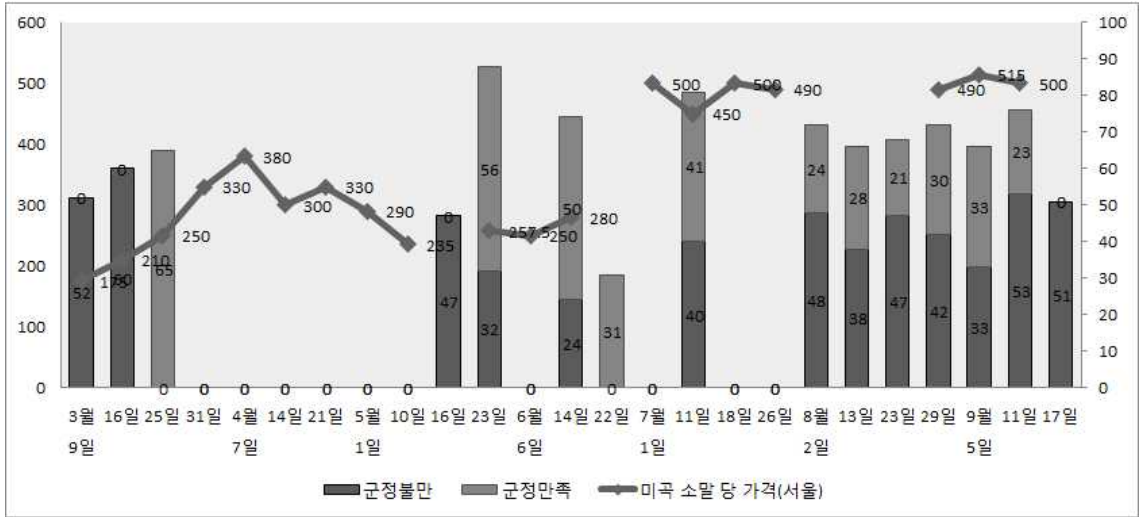


그림 3. 1946년 3월 말~9월 중순 서울 미가의 동향과 군정만족/불만족도

그림 3에서 꺾은 선 그래프는 미가의 추이를, 막대그래프는 미군정에 대한 만족/불만족도를 표시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가의 추이와 미군정 만족도의 추이가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미가가 점차 상승하는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군정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아졌다.⁴⁴⁾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 그래프에는 제외했지만, 미가가 380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던 4월 7일, 《여론동향》은 “미군정에 대한 대중의 신용과 존중이 이번 주에 역대 최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고 보고했다.⁴⁵⁾

4월 7일 한 차례 정점을 찍은 미가가 하락하고 안정화되자,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도 다시 개선되었다. 4월 7일 이후 미가의 하락세는 미군정이 식량배급을 즉각 실시하고, 도시로의 쌀 반입을 허락했기 때문이었다.⁴⁶⁾ 4

44) 3월 25일의 미군정 만족도65%는 다소 예외적인 수치였다. 이 주의 만족도만 높았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이때도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은 식량문제를 그 이유로 들었다. 《여론동향》 4호(1946.3.25.)

45)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식량부족이 군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보고했다. 《여론동향》 6호(1946.4.7.)

46) 군사실문서철 Box.33 “Report of investigation relative to the recent fluctuation of the price of rice in SEOUL”(1946.4.19.)

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미군정에 대한 여론은 개선되었고⁴⁷⁾, 그림에서 보이듯 미가가 안정적이었던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7월 1일부터 미가가 다시 급등했는데, 전례 없는 홍수로 인한 교통단절과 미곡배급의 중단 때문이었다.⁴⁸⁾ 미곡배급 중단은 미곡수집의 실패로 인해 배급할 미곡비축량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소두당 500원 전후에서 전혀 하락하지 않았고, 그와 발맞추어 미군정에 대한 불만족도도 40~50%대 전후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가의 등락은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와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었다. 미곡배급의 실시와 도시지역의 미곡반입 허가는 일시적인 미가 안정화를 가져왔고,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6월 말에서 7월 초 홍수의 발생과 미곡배급의 중단은 곧 미가의 급등을 가져왔고, 다시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미곡배급의 실시는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었지만 미군정의 행정능력을 불신하는 분위기를 없앨 수는 없었다. 식량배급의 실시 자체도 불안정했고, 따라서 한국인들은 미군정의 식량정책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미군정은 식량위기가 미군정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1946년 5월 중순부터 정기 여론조사의 한 항목으로 미군정 식량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추가했다.⁴⁹⁾

47) 《여론동향》 7호(1946.4.14.), 8호(1946.4.21.), 9호(1946.5.1.)

48) 《여론동향》 17호(1946.7.1.) ; 최영목, 2008, 116쪽. 7월 7일부터 미곡 대신 소맥분이나 옥수수, 소맥, 대맥이 약간씩 지급되었다. 7월 27일에서 8월 5일 사이 1일 소맥분 100g과 쌀 0.5홉을 배급한 것을 제외하면 미곡배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49) 《여론동향》 11호(1946.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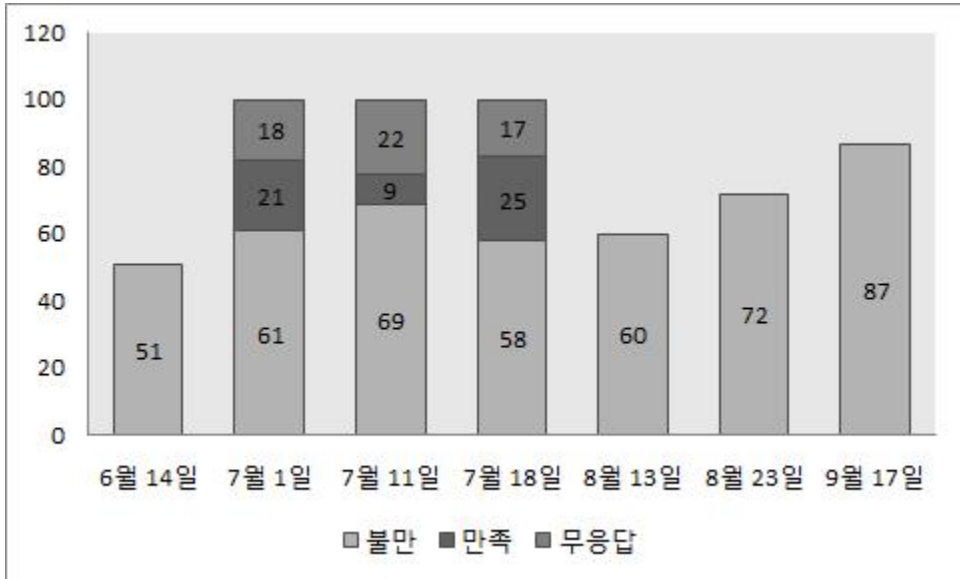


그림 4. 1946년 미군정 식량정책 만족도 변화

출처: 《여론동향》 15, 17, 18, 19, 22, 23, 27호

그림 4는 《여론동향》에서 언급된 미군정 식량정책에 대한 불만/만족/무응답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식량정책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5월 중순부터 9월 17일 까지, 수치를 언급하지 않고 논평으로 대신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모든 여론동향은 항상 일관된 추세를 보였다. 모든 《여론동향》이 미군정의 식량배급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뚜렷한 반감을 보고했다.⁵⁰⁾

7월 1일부로 불만족도가 10%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발생한 홍수와 그로 인한 미가급등 때문이었다. 이후 미가는 하락하지 않고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했으며, 따라서 식량정책에 대한 불만족도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식량정책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는 일관되게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50)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군정의 식량정책을 반대하거나 불만을 갖는다는 언급이 등장한 것은 《여론동향》 11호(1946.5.15.), 12호(1946.5.23.), 13호(1946.5.29.), 14호(1946.6.6.), 16호(1946.6.22.), 20호(1946.7.26.), 24호(1946.8.29.), 25호(1946.9.5.), 26호(1946.9.11.)였다. 군정 식량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경향을 보고한 경우는 없었다.

점이 특징이었다. 수치의 증감은 있지만, 모든 조사에서 불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만족/불만족을 조사하는 동시에 만족/불만족의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는데 미군정의 행정능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여론동향》에서 언급된 개개인들의 논평은 미군정의 미곡수집-배급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했다.

이처럼 미군정의 정기 여론조사 자료들은 1946년 당시 도시지역에서 식량위기가 심각했고, 그에 따라 미군정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또 식량위기에 대한 미군정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일어나면서, 미군정의 식량정책에 대한 불신도 팽배했음이 나타났다. 미군정이 도시, 특히 서울을 중시하여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시행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군정 입장에서는 큰 위기였다.

식량위기로 인한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 하락과 정책 불신은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하 2절에서 다루겠지만, 토지개혁과 관련된 여론조사였다. 미군정 행정력에 대한 불신이 퍼지면서, 미군정 주도의 귀속농지 매각에 반대하는 여론이 나타났다.

2. 한국인의 경제체제 선호도 조사

미군정은 여론조사 시행을 통해 한국인의 경제체제 선호도에도 관심을 보였다. 미군정 여론조사는 한국인이 사회주의 정책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또 국가 주도의 경제통제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한국인의 경제체제 선호도에 대한 조사는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꾸준히 시행되었으며, 때로는 비정기 여론조사에서도 다뤄졌다.

한국인의 경제체제 선호도와 연관을 갖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개혁이었다. 미군정은 경제체제 선호도와 관련된 여론조사 가운데 토지개혁과 연관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미군정은 남한사회의 토지개혁 요구를 귀속농지 판매로 무마하고자 시도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귀속농지의 처분”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이처럼 미군정이 경제체제 선호도와 개혁문제에 신경을 쓴 이유는 북한의 존재 때문이었다. 미군정은 북한에서 실시되는 각종 개혁과 입법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남한사회에 영향력을 얼마나 발휘할 것인지 주의를 기울였다.

표 3 미군정 여론조사 일람표-한국인의 경제체제 선호도 조사

여론조사 주제	시행시기	조사내용
귀속농지의 처분	1946.3월~9월	일본인 소유의 농지에 대해 다음 중 선호하는 정책은? 군정에 의한 판매/군정에 의한 분배(무상)/보류/모르겠다
한국인지주 농지의 처분	1946.3월~9월	한국인지주 소유의 농지에 대해, 다음 중 선호하는 정책은? 군정에 의한 판매/군정에 의한 분배(무상)/보류/모르겠다
집단농장(농지국유화)	1946.3월~1947.3월	당신은 모든 농지를 정부소유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그렇다/아니다/모르겠다
산업국유화	1946.3월~1947.3월	다음 중 선호하는 정책은? 주요산업 국유화/모든 산업 국유화/주요산업 통제만/통제나 소유 없음
노조 선호도	1946.3월~9월	노조 선호/비선호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1946.7월	총 27개 항목 중에서 선호하는 경제체제(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정부의 경제체제 권한범위, 귀속농지 처분, 한국인대지주 농지 처분을 묻는 항목을 포함.
노동에 관한 여론조사	1946.9.17.~30	노조 선호도와 함께 북한의 노동법과 같은 노동법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질문. 또한 노동시간, 퇴직금 제도, 최저임금제, 유급휴가 등 노동자 복지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질문.

출처: 《여론동향》 4호(1946.3.25.)~33호(1947. 7. 5.) ; 신복룡 편, 1993 《한국분단사 자료집》 6 원주문화사, 7~42쪽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미

군정기 정보자료집: 노동관련 보고서(1945.9-1950.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
 구소, 124~127쪽.

표3은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 가운데, 한국인의 경제체제 선호도와
 관련된 것들만 목록으로 만든 것이다. 토지개혁(귀속농지·한국인지주농지
 의 처분), 집단농장화, 산업국유화, 노조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조 선호도를 제외한 나머지 여론조사의 경우, 한국인들의
 사회주의·공산주의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1946년 3월 12일에
 시행된 “농지의 처분과 산업, 다른 자산들의 국유화에 대한 한국인 여론
 조사” 보고서에서 미군정의 의도가 드러났다.⁵¹⁾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이
 여론조사가 한국인들의 근본적인 경제 믿음을 알아내기 위해서 실시한 것
 이며, 논란의 여지가 많은 단어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의도적으로 사
 용을 피했다고 설명했다.

미군정의 여론조사로 드러난 당시 한국인이 선호하는 경제체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었다. 특히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주요산업국유화 내지는 모든 산업국유화를 선호할 정도
 였다.

표 4.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 경제체제 선호도 문항과 응답률

문항 별 질문	응답지-응답률
3.당신은 어떤 것을 선호하 는가?	자본주의-13% 사회주의-70%(우익69%, 좌익64%, 중립 77%) 공산주의-10% 모르겠다-7%
8.다음 경제적 권력과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한국정부 가 가져야 하는가?	모든 농지의 소유-32%(찬성율) 1인 소유 농지의 제한-62% 모든 대규모 산업의 소유-62%

51) 군사실문서철 Box.19 “Survey of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s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y and other properties”

	모든 경제활동의 통제-50%? 모든 생산수단의 소유-50%? 전화와 전문 시스템의 소유-69% 철도의 소유-? 라디오 방송국의 소유-? 일상품 가격의 규제-60% 임금의 규제-51% 외국과 통상의 규제-65% 모든 사업과 산업의 허가-50%? 식량 배급 통제-55% 원료 배분 통제-45% 생산품의 배분 통제-33%
16.한국정부가 수립된 후,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토지들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	정부의 손에 보유-36% 소작농에게 판매-30% 소작농에게 분배-31% 모르겠다-3%
17.한국정부가 수립된 후, 한국인 대지주들이 소유했던 토지들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	현재 소유자의 손에 남아있도록 허락-12% 각 지주는 특정한 양의 토지를 제한받고, 나머지는 정부에 적당한 가격에 판매-48% 각 지주는 특정한 양의 토지를 제한받고, 나머지는 정부에 의해 압수-22% 모르겠다-3%

출처: 신복룡 편, 1993 《한국분단사자료집》 6 원주문화사.(원전: RG407 Box.2074 “Type and Structure of a Future Korean Government”

*밑줄 친 부분은 원문 강조

위의 표는 미군정이 1946년 7월 서울주민들 847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미래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 가운데, 경제체제 선호도와 연관된 항목만을 추출한 것이다. 8번 항목의 응답률은 찬성만 표시했으며, 물음표가 붙은 것은 가독성이 떨어져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8번 항목에서 미군정은 한국인들에게 미래의 한국정부가 어떠한 경제통제책을 시행할 권한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결과에서 드러나듯, 응답자들은 미군정이 나열한 거의 모든 경제통제책에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모든 농지의 소유와 생산품의 배분 통제는 각각 32%, 33%로 다소 낮은 찬성률을 얻었지만, 그 밖에 1인 소유 농지의 제한, 모든 대규모 산업의 소유, 일상품 가격의 규제, 임금의 규제, 식량 배급 통제 등은 5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산업국유화의 경우에는 위의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전, 전국적으로 실시된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미 꾸준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었다. 대규모 산업의 국유화 내지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가 높은 지지를 받았고, 여론조사가 시행된 기간 내내 일관적이었다. 산업국유화에 대해서 최초로 질문한 여론조사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 1946년 3월 5일에서 11일 사이 시행되었으며, “농지의 처분과 산업, 다른 자산들의 국유화에 대한 한국인 여론조사”라는 제목이었다.⁵²⁾ 이 여론조사에서 ‘모든 주요 산업의 정부소유’와 ‘사적인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정부소유’는 각각 33.3%와 22.7%의 지지율을 얻었다. ‘주요산업만 정부가 통제’하자는 의견도 33.1%였고, 반면 ‘주요산업을 정부가 통제하거나 소유하지 않음’은 10.9%에 그쳤다. 이후 이어진 정기 여론조사에서도, 모든 산업이나 최소한 주요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선호하는 비율은 과반수를 쭉 넘겼다.⁵³⁾

52) 군사실문서철 Box.19 “Survey of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s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y and other properties”(1946.3.12.)

53) 《여론동향》에서는 산업국유화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하고 있으나, 대개는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강 다수(majority)가 지지한다는 정도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위의 여론조사와 항목을 동일하게 설정했는지 하는 부분이 확실치 않다. 《여론동향》 15호(1946.6.14.)의 경우 ‘공장들의 국유화’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찬성 40%, 반대33%, 모르겠다 27%의 답변을 받았다. 반면 《여론동향》 16호(1946.6.22.)의 경우에는 모든 산업국유화/대규모 산업 국유화/국가통제 반대/의견 없음으로 나눠서 질문했고, 각각 19%/51%/6%/24%의 답변을 얻었다. 산업국유화라는 동일한 주제의 여론조사였지만, 미군정은 때로 여론조사 내용을 살짝 바꿔가면서 시행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론동향》 4호(1946.3.25.), 9호(1946.5.1.), 11호(1946.5.15.), 12호(1946.5.23.), 14호(1946.6.6.), 15호(1946.6.14.), 16호(1946.6.22.), 17호(1946.7.1.), 18호(1946.7.11.), 19호(1946.7.18.), 20호(1946.7.26.), 23호(1946.8.23.), 24호(1946.8.29.), 25호(1946.9.5.), 26호(1946.9.11.), 27호(1946.9.17.), 28호(1946.10.3.).

반면 집단농장(Cooperative farming)이나 농장국유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집단농장이나 농장국유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⁵⁴⁾

16번과 17번 항목은 토지개혁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한국정부 수립 후 어떤 식으로 귀속농지와 한국인대지주농지가 처리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판매든 분배든 소작농이 귀속농지와 한국인대지주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개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귀속농지에 대해서는 판매가 30%, 분배가 31%의 지지를 얻었으며, 한국인대지주농지에 대해서는 판매가 48%, 분배가 2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귀속농지와 한국인대지주농지의 처분 여론조사 또한 정기 여론조사로 꾸준히 조사되는 주제였다. 이 여론조사는 1946년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북한의 토지개혁과도 연관이 있었다. 1946년 초 북한의 토지개혁이 발표되어 남한 측에 크게 보도된 바가 있었고, 1946년 3월 초에는 북한의 토지개혁 법령이 발표된 상황이었다.⁵⁵⁾ 미군정은 북한의 토지개혁 시행이 남한 측에 어떠한 선전효과를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고, 귀속농지·한국인대지주농지의 처분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⁵⁶⁾

특히 귀속농지의 처분 여론조사는 미군정이 실제 귀속농지 판매의 시행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했다. 미군정은 귀속농지에 한하여 판매를 고려하고 있었고, 한국인대지주농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혁도 고려

54) 《여론동향》 4호(1946.3.25.), 9호(1946.5.1.).

55) 신병식, 1992 《한국의 토지개혁에 관한 정치경제적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131쪽.

56) 미군정은 “서울과 지방에서 일본, 소련 선전의 효율성” 여론조사(1945.5.20.)에서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와 “만약 들었다면, 당신은 군정이 남한에서 비슷한 것을 제정해야한다고 믿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북한의 토지개혁이 얼마나 선전효과를 가지고 있을지 확인하기 위한 항목이었다. 전반적인 반응은 미군정이 남한에서 비슷한 것을 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방에서는 제정해야 한다가 17%, 반대가 53%, 모르겠다가 30%였고, 서울은 제정해야 한다가 21%, 반대 73%, 모르겠다 6%의 답변이 나왔다. 군사실문서철 Box.29 “Effectiveness of Japanese and Soviet propaganda in the Provinces and in Seoul”

하지 않고 있었다. 제한적이고 개량적인 조치로 남한 내 토지개혁 요구를 무마하려는 모습이었다. 미군정의 입장은 최초로 귀속농지의 처분과 한국인대지주농지의 처분에 대한 질문을 넣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표 5. “농지의 처분과 산업, 다른 자산들의 국유화에 대한 한국인 여론조사” 가운데 농지의 처분 관련 항목들

문항 별 질문	응답지-응답률
1.귀속농지의 처분 “당신은 일본인이 소유했던 농지와 관련하여, 다음 가운데 어떤 정책이 시행되기를 희망하는가?”	a.가까운 장래에 땅에 살고 있는 소작농들에게 군정이 판매-17.5% b.가까운 장래에 소작농들에게 군정이 분배(무상 분배)-14.5% c.토지의 법적 소유권을 최초로 설립된 한국정부에 넘기고, 어떤 토지도 현재로써는 군정이 판매하지 않을 것-68%
2.한국인 대지주 농지의 처분 “당신은 한국인 대지주의 농지가 경작하는 소작농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믿는가?”	a.그렇다-66.3% b.아니다-33.7%
2-a.‘그렇다’를 선택 시 “소작농에게 판매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주어져야 하는가?”	a.판매-72.9% b.분배-27.1%
2-b.‘아니다’를 선택 “이 토지는 정부가 인수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지주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a.정부-76.9% b.지주들-23.1%

출처: 군사실문서철 Box.19 “Survey of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s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y and other properties”

귀속농지와 한국인대지주 농지의 처분 항목 가운데, 귀속농지에 대해서만 ‘군정 정책’을 묻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대지주 농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군정’이라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귀속농지만 정책적 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미군정의 입장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다.⁵⁷⁾

귀속농지의 처분 여론조사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항목구성이다. 구성이 매우 단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분배(무상분배), 판매(유상판매), 보류(한국정부에 소유권 이전)라는 세 가지 선택지만이 있다. 분배와 판매의 경우 주체는 ‘군정’이고, 보류의 경우에는 주체가 ‘미래의 한국정부’이다. 이러한 선택지 구성은 방안(판매, 분배)과 주체(미군정, 한국정부)를 뒤섞어 놓은 것으로, 정확한 여론을 확인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방안과 주체에 대한 정확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귀속농지·한국인대지주 농지의 처분을 시행할 주체로 미군정과 미래의 한국정부 가운데 어느 쪽이 적합한가를 묻고, 이어 세부적인 처분방안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항목구성이 다소 부적절했지만, 위의 여론조사 결과로 한 가지는 명확했다. 당시 한국인들은 미군정이 주체가 되어 귀속농지를 처분하는 것을 반대했다.

57) 미군정은 이러한 문제를 의식했는지, 두 번째 여론조사부터는 귀속농지와 한국인대지주 농지에 대한 항목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조정했다. 그러나 미군정의 토지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미군정은 귀속농지의 처분문제만 고려할 뿐, 한국인대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다른 정책을 입안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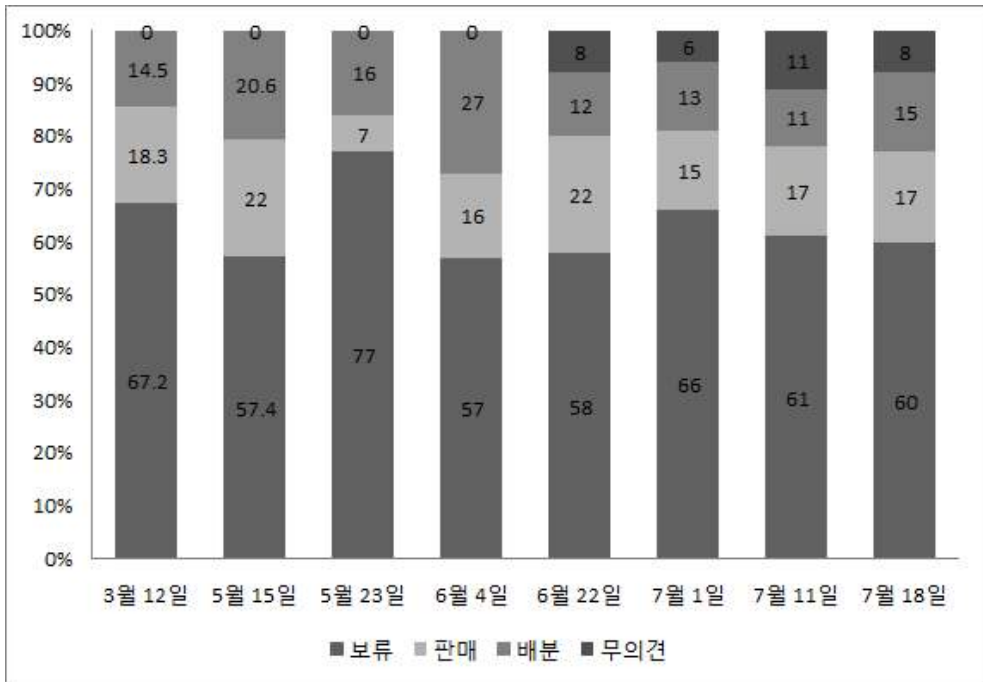


그림 5. 1946년 귀속농지의 처분에 대한 여론조사

출처: 군사실문서철 Box.19 “Survey of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s and the nationalization of industry and other properties”(1946.3.12.) ;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s”(1946.5.15.) ; “Public opinion in Kyonggi-do relative to the disposition of farmlands”(1946.5.23.) ; “Disposal of Farmlands”(1946.6.4.) ; 《여론동향》 16호(1946.6.22.), 17호(1946.7.1.), 18호(1946.7.11.), 19호(1946.7.18.)

그림5는 귀속농지의 처분에 관한 여론조사 수치들을 정리한 것이다.⁵⁸⁾ 6월 4일까지의 여론조사는 보류/판매/분배의 세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6월 22일 이후의 여론조사는 세 항목 이외에 ‘의견 없음’이 추가되었다. 3월 12일과 5월 23일의 여론조사는 보류 의견이 특히 다른 때보다 높았는데,

58)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언급한 경우만 통계를 낸 것이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간단한 논평만 실은 경우도 있었다. 논평만 언급한 경우에도 전반적인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류의견이 높다는 논평이 주로 실렸다.

여론조사 시행지역이 서울과 경기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⁵⁹⁾

판매와 분배의 의견은 대체로 반반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수치들이다. 보류를 선택한 50%이상의 다수가 판매와 분배 가운데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에서 핵심은 보류의견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미군정에 의한 귀속농지 처분을 반대하는 여론이 항상 60% 전후에 형성되었다. 한국인 대지주농지의 처분에 관한 여론도 마찬가지로였다. 미군정에 의한 처분을 반대하는 여론이 60~70%대를 넘나들었다.

59) 경기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보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미군정은 1946년 5월 25~31일 사이 남한 전역의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각각 369명, 1069명을 대상으로 귀속농지·한국인대지주 농지의 처분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경기도의 결과와 비교했다. 그 결과 경기도에 비해 다른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는 귀속농지·한국인대지주 농지의 처분에 대해 분배나 판매의 비율이 더 높았고, 보류 의견은 각각 57%와 75%로 경기도의 77%, 83%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기도 쪽은 보류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미군정은 전반적인 경향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경기도 쪽의 보류의견이 더 높은 것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군사실문서철 Box.19 “Public opinion in Kyonggi-do relative to the disposition of farmlands”(1946.5.23.) ; “Disposal of Farmlands”(194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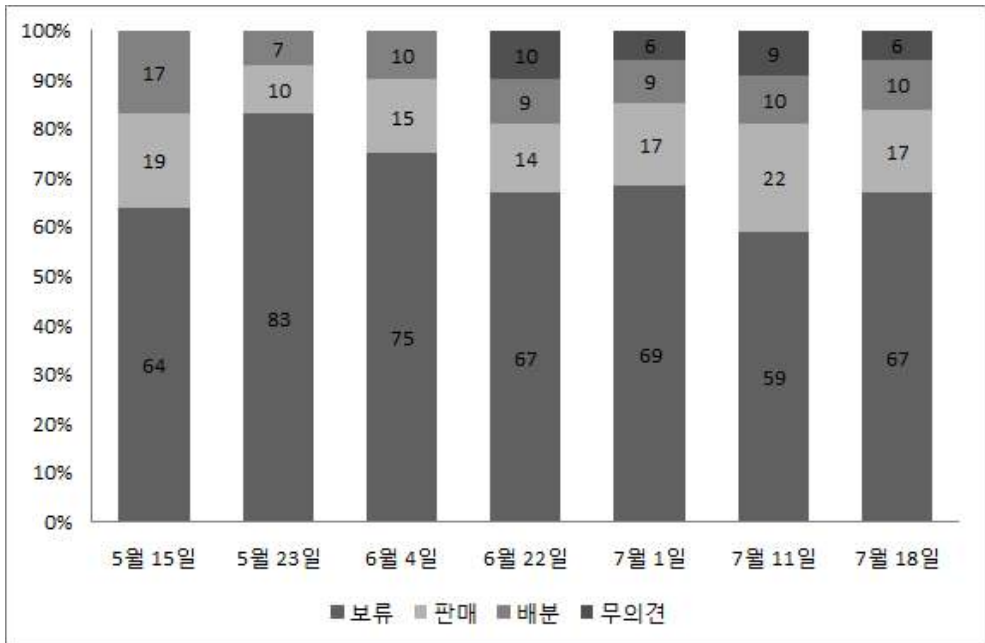


그림 6. 1946년 한국인 대지주 토지의 처분에 관한 여론조사

출처: 군사실문서철 Box.19 “Korean Public Opinion on the Disposition of Farmlands”(1946.5.15.) ; “Public opinion in Kyonggi-do relative to the disposition of farmlands”(1946.5.23.) ; “Disposal of Farmlands”(1946.6.4.) ; 《여론동향》 16호(1946.6.22.), 17호(1946.7.1.), 18호(1946.7.11.), 19호(1946.7.18.)

그림6 또한 5월 23일의 수치는 서울과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5월 23일의 보류의견 비율이 83%로 유독 높긴 했지만, 다른 시기에 시행된 것들도 대부분 60%가 넘어간 것을 볼 수 있다. 귀속농지의 처분과 유사한 여론의 추이였다.

당시 미군정에 의한 귀속농지·한국인대지주농지의 처분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셌던 이유는 미군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 때문이었다. 앞서 살펴본 1946년 7월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에서는 토지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실히 드러났다. 한국인대지주농지의 처분에 대

해 정부가 유상매수 또는 무상몰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총 70%에 달했고, 지주들 손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쪽은 12%에 불과했다.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와 다른 귀속농지·한국인대지주농지의 처분 여론조사의 차이점은 오직 ‘주체’였다. 주체가 미래의 한국정부냐, 아니면 미군정이냐는 점이 정반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 여론은 미래의 한국정부가 개혁조치를 취하는 것은 지지하나, 미군정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반대했다.

미군정은 또한 보류 의견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한국인들의 미군정 불신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군정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미군정의 정책으로 귀속농지의 처분이 시행될 경우 그 방식을 신뢰하지 않았고⁶⁰⁾, 나아가 군정의 그 어떤 경제정책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⁶¹⁾

미군정은 귀속농지의 처분 여론조사가 일관되게 높은 반대여론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고, 귀속농지 매각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⁶²⁾ 여론조사 결과만이 귀속농지 매각계획을 취소한 원인은 아니었으나, 미군정의 발표는 여론조사 결과만을 언급했다.⁶³⁾

마지막으로 미군정은 노조에 대한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그 지지도의 추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노조에 대한 비선호가 높은 편이었다. 노조에 대해서 정치에 참여하여 선전활동을 하고, 노동자의 복지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⁶⁴⁾

60) 《여론동향》 10호(1946.5.10.)

61) 군사실문서철 Box.19 “Public opinion in Kyonggi-do relative to the disposition of farmlands”(1946.5.23.)

62) 《동아일보》 1946년 6월 26일자. 러취는 6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임시정부 수립까지 보류’ 의견이 80%가 나왔으며, 이에 토지매각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실제 보류의견이 80%까지 나온 적은 없으므로, 러취의 발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소 과장한 것이었다.

63) 귀속농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미군정 내의 계획 추진세력과 고위층 간의 대립이 존재했다. 당시 기자로 한국을 방문했던 마크 게인에 따르면, 귀속농지의 처분 여론조사는 미군정이 모든 토지개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된 것이었다. 번스의 매각안을 좌절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번스의 귀속농지 매각계획은 “번스의 우극(Bunce’s Folly)”로 회자되었다고 한다. 마크 게인, 1986 《해방과 미군정》 115쪽. 번스의 귀속농지 매각계획 작성에 관해서는 황윤희, 2010 〈번스(Arthur C. Bunce)의 내한활동과 한국문제인식〉 《숭실사학23》 참고.

64) 《여론동향》 4호(1946.3.25.), 5호(1946.3.31.), 7호(1946.4.14.), 9호(1946.5.1.), 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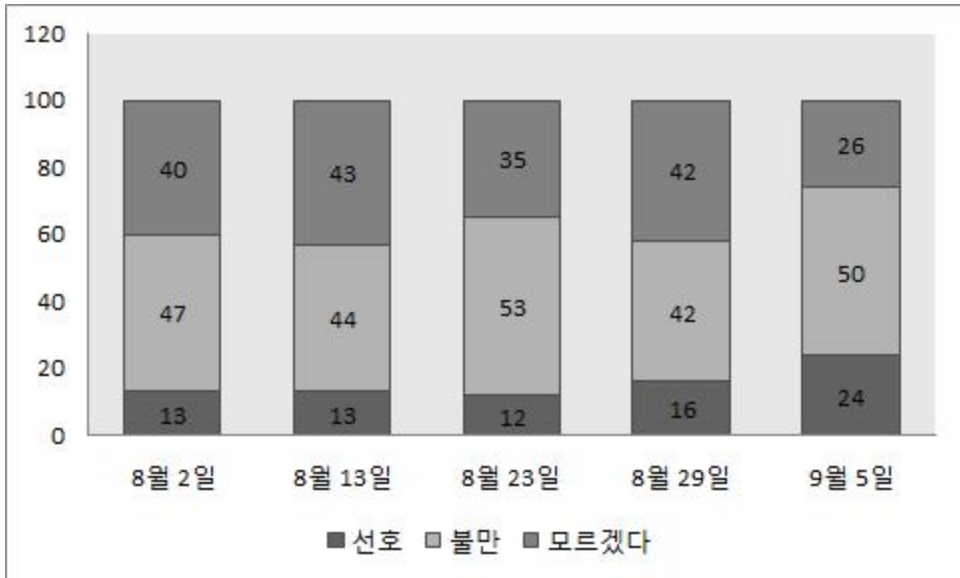


그림 7 1946년 노조선호도 여론조사

출처: 《여론동향》 21호(1946.8.2.), 22호(1946.8.13.), 23호(1946.8.23.), 24호(1946.8.29.), 25호(1946.9.5.)

그림7은 《여론동향》에 보고된 정기 여론조사 가운데 노조 선호도에 대해 수치를 언급한 경우만 통계를 낸 것이다. 노조선호도 조사는 1946년 3월부터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수치는 8월에서 9월 초의 것만 언급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논평의 내용을 볼 때, 다른 시기의 추이도 위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림7을 보면 전반적으로 노조에 우호적인 여론이 매우 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호적인 응답이 15% 전후에 형성되는 반면, 불만이 있는 경우는 40~50%대였고, ‘모르겠다’도 30~40%대를 오르내린 것을 볼 수 있다.

노조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지만,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은 강했다. 미군정이 1946년 9월 17일과 30일 사이 시행한

(1946.5.15.), 12호(1946.5.23.), 13호(1946.5.29.), 14호(1946.6.6.), 15호(1946.6.14.), 16호(1946.6.22.), 19호(1946.7.18.), 20호(1946.7.26.), 21호(1946.8.2.), 22호(1946.8.13.), 23호(1946.8.23.), 24호(1946.8.29.), 25호(1946.9.5.), 27호(1946.9.17.),

“노동에 관한 여론조사(Public Opinion Survey on Labor)”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⁵⁾

표 6. “노동에 관한 여론조사” 주요 문항과 응답률

문항 별 질문	응답지-응답률
1.당신은 노조, 즉 노조의 원칙을 찬성하는가?	그렇다-28% 아니다-4% 모르겠다-68%
2.당신은 한국노조를 찬성하는가? (미국 점령지에 있는)	그렇다-15% 아니다-27% 모르겠다-58%
3.당신은 북한에서 제정된 노동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24% 아니다-76%
4.당신은 이 법안을 찬성하는가? (3번에서 들어본 적이 있다가 선택한 경우 질문)	그렇다-44% 아니다-34% 모르겠다-22%
5.당신은 어린이 노동법을 찬성하는가?	그렇다-59% 아니다-6% 모르겠다-35%
8.당신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비율로 지불받아야 한다고 믿는가?	그렇다-38% 아니다-30% 모르겠다-32%
9.당신은 최저임금법을 찬성하는가?	그렇다-53% 아니다-14% 모르겠다-33%
12.정상근무 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것에 대해 어떤 지불을 받아야 하는가?	기본급-10% 1.5배-35% 2배-55%
13.당신은 정규직을 위한 유	그렇다-80%

65)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노동관련 보고서 (1945.9-1950.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23~127쪽.

급휴가를 찬성하는가?	아니다-2% 모르겠다-18%
14.찬성한다면, 얼마나?	1주-2% 2주-12% 3주-36% 한 달-50%

출처: 한림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노동관련 보고서 (1945.9-1950.4)》 한림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23~127쪽.

“노동에 관한 여론조사”는 서울 지역 주민 총 328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우익이 676명, 좌익이 255명, 중립이 2357명이었다. 노조 지지여부와 함께 각종 노동여건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노조 지지도는 여전히 15%로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비우호보다는 ‘모르겠다’가 58%로 높은 것이 기존과는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3번과 4번 항목에서 드러나듯, 이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노동법 제정을 의식하여 시행된 것이었다.⁶⁶⁾ 두 항목은 북한의 노동법 제정이 얼마나 남한에 알려졌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른 항목들 또한 북한의 노동법 내용과 연관이 있었다.

표 7 북한 노동법 주요내용과 미군정 여론조사 결과의 비교

세부 항목	북한 노동법의 주요내용	미군정 여론조사 주요결과(지지율)
1.근로시간	1일 8시간제	1일 6~8시간(88%), 주당 40시간(29%) 또는 50시간(38%)
2.소년노동	14~16세, 1일 6시간까지. 시간외 노동 금지.	소년노동법 찬성(59%), 14~16세부터 노동 가능(61%), 국민학교 6학년 이상부터(62%)

66) 이 여론조사에서 언급하는 북한의 노동법은 1946년 6월 2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제29호 결정에 따른 《로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을 의미한다. 이 법은 식민지적 착취의 청산과 근로대중의 생활개선을 목표로 했다. 이철수, 1995 <북한의 노동법> 《통일문제연구》 24 평화문제연구소, 114~117쪽.

3.임금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동일노동과 기술에 대해 동일 임금.	여성에게 동일 임금지급(38%), 최저임금제 찬성(53%)
4.시간외 근로	원 임금의 50%를 가산(1.5배)	2배 지급(55%), 또는 1.5배(35%)
5.유급휴가	정기 휴가 2주, 보충휴가(평균 임금을 지급)	유급휴가 찬성(80%), 기간은 한 달(50%) 혹은 3주(36%)
6.기타	임산부 관련 규정, 사회보험제도, 노동쟁의 등.	퇴직금 찬성(79%), 노조 지지도 등.

출처: 한림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노동관련 보고서 (1945.9-1950.4)》 한림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23~127쪽 ; 이철수, 1995 〈북한의 노동법〉 《통일문제연구》 24 평화문제연구소, 114~117쪽.

표7은 북한 노동법의 주요내용과 미군정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미군정 여론조사 결과는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들로 내용을 구성했다. 상당 부분 북한 노동법에 나타난 노동조건 개선 내용들을 여론조사에 반영했음을 볼 수 있다.

북한의 노동법을 지지하는 응답율이 44%에 달하기도 했지만, 미군정의 여론조사 결과는 당시 한국인들이 북한의 노동법과 같은 노동조건을 원했음을 보여준다. 근로시간 제한과 소년노동의 제한, 최저임금제 시행, 시간외 근로에 대해 2배의 수당 지급, 유급휴가제 시행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지지하는 한국인 여론이 드러났다.⁶⁷⁾

이상 2장에서 미군정 여론조사를 통해 당시의 사회동향을 부분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당시 식량위기의 발생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에서 미군정에 대한 지지도가 심각하게 떨어지고, 미군정의 행정력에 대한 불신이 발생했음을 보았다. 미군정에 대한 지지도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67) 미군정은 여론조사 시행과 함께 법령 제112호 아동노동법규(1946.9.18.)를 제정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고용제한과 아동의 노동시간 제한을 두었다. 나아가 법령 제121호 최고 노동시간(1946.11.7.)을 제정하여 최고 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고, 최대 잔업시간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 이 법령들의 일부 조항들은 효력이 정지되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법이 되었다. 유혜경, 2008 〈미군정시기 노동운동과 노동법〉 《노동법학》 26호, 294~295쪽.

식량위기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군정이 정치의 중심지로써 서울을 중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식량위기의 발생과 미군정 지지도의 하락은 점령에 있어 상당한 위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미군정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당시 한국인들의 성향도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정부 통제의 경제체제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주요산업 내지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고, 정부가 여러 경제통제책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귀속농지와 한국인대지주농지에 대한 토지개혁도 시행되기를 원했다. 토지개혁의 세부방안인 판매냐 분배냐 하는 점에서는 여론이 분분했으나, 어떤 방식으로든 소작농에게 농지를 얻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미군정이 주도하는 토지개혁에는 반대여론이 강했으며, 미래의 한국정부가 해결할 일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에서는 노조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반감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었으나, 노동조건 개선에 있어서는 북한의 노동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존재했다. 토지개혁과 함께, 한국인들이 요구하는 또 다른 개혁이었다.

三. 비정기 여론조사 시행과 정치동향

미군정은 비정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론을 확인하고자 했다. 미군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움직이고 있는지, 또 미군정의 정치구상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했다.

미군정의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여론조사들은 서울지역에서만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 다룰 정치동향은 서울에만 국한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좌익은 미군정이 서울지역에서 시행한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응답거부를 약간이나마 한 적이 있었다.⁶⁸⁾ 서울 지역의 좌익이 미군정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를 분석할 때는 우익 성향이 약간 과장되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미군정의 정치 여론조사는 앞서 검토한 정기 여론조사와 달리, 미군정의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된 항목들이 상당수 존재했다. 정치 여론조사가 다른 주제들은 미군정이 원하는 여론의 흐름이 전제되어 있고, 그러한 여론의 흐름으로 한국인들 여론이 흘러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비정기 여론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당시 정치동향을 확인할 때, 항목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정기 여론조사의 항목을 분석하여 미군정의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미군정의 정치 여론조사들은 크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당·

68)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에는 응답률도 영향을 미친다.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이 높다면,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미군정은 여론조사의 응답률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좌익의 응답거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에서 극히 일부분 드러났을 뿐이다.

정치지도자 지지도와 특정이슈에 대한 여론, 선거권이었다. 세 요소는 선거를 중심으로 맞물렸다. 미군정 정치구상의 핵심이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군정의 정치구상은 민주의원, 입법의원을 통한 한국인 대표기구의 창설을 기반으로 했다. 따라서 미군정 여론조사에서도 이들 기구에 대한 한국인 지지도를 질문하고 있었고, 이들 여론조사는 서울지역에서 대규모로 시행되었다.

미군정이 자신의 정치구상을 넣어 시행한 첫 여론조사는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으로, 민주의원 구상을 질문했다.⁶⁹⁾ 이 여론조사는 1946년 3월 16일에서 29일 사이 서울지역에서 4177명을 대상으로 행해졌고, 총 11개 문항이었다. 조사기간이나 대상자 수의 면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여론조사였다. 이 여론조사는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첫 번째는 정당 및 지도자 지지도, 두 번째는 민주의원을 매개로 한 과도정부 구상에 대한 반응, 세 번째는 선거권에 관한 것이었다. 여론조사의 문항설정과 응답률은 다음과 같다.

표 8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 여론조사 문항과 응답률

문항 별 질문	응답지-응답률(1차 조사, 2차 조사)
1.당신은 한국이 미래에 어떤 종류의 정부를 가질 것인지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84%, 87% 아니다-16%, 13%
2.당신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가?	그렇다-73%, 75% 아니다-27%, 25%
3.만약 다음 정당에서 후보들이 선거에 참여한다면, 어느 쪽을 지지하겠는가?	한민당, 국민당 등(우익정당)-43%, 40% 인민당, 공산당 등(좌익정당)-33%, 31% 이 중에 없다/모르겠다-24%, 29%
4.당신은 다음 중 누가 인민대중의 복지와 이익을 위해 가장 열심히 일했다고 여기	김구-22%, 20% 김규식-9%, 8% 이승만-32%, 30%

69) 군사실문서철 Box.34 “Statistical analysis of political trends in Seoul”(1946.3.31.)

는가?	<p>안재홍-5%, 9%</p> <p>조만식-4%, 3% (우익지도자 총계-72%, 70%)</p> <p>박현영-10%, 11%</p> <p>여운형-13%, 15%</p> <p>김일성-3%, 2%</p> <p>김두봉-2, 2 (좌익지도자 총계-28%, 30%)</p>
5.당신은 다음 중 어느 정책을 선호하는가?	<p>미소 양군 철수(한국의 내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49%, 55% (강조는 필자)</p> <p>미국인 고문 아래 민주위원이 정부역할-12%, 8%</p> <p>미군정이 선거 개최, 정부수립-6%, 5%</p> <p>민주위원이 선거 개최, 정부수립-19%, 13%</p> <p>남한정부 수립하지 않음-14%, 19%</p>
6.당신은 미군·소련군이 곧 철수한다면,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가?	<p>그렇다-39%, 42%</p> <p>아니다-40%, 33%</p> <p>모르겠다-21%, 25%</p>
7.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소련군 철수를 선호하는가? (6번에서 그렇다 또는 모르겠다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질문)	<p>그렇다-70%, 78%</p> <p>아니다-19%, 16%</p> <p>모르겠다-11%, 6%</p>
8.다음 정당 중 인민대중의 복지에 덜 관심이 있는 정당은?	<p>한민당, 국민당 등-31%(2차 조사 결과)</p> <p>인민당, 공산당 등-69%(2차 조사 결과)</p>
9.만약 선거가 치러진다면, 성인이고, 분별있고, 법을 지키는 모든 시민에게 투표가 허가되어야 하는가?	<p>그렇다-66%, 65%</p> <p>아니다-27%, 29%</p> <p>모르겠다-7%, 6%</p>
10.만약 선거가 치러진다면, 성인이고, 분별 있고, 법을 지키는 시민이면서 한국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이들만 투표가 허가되어야 하는가?(9	<p>그렇다-86%, 87%</p> <p>아니다-6%, 5%</p> <p>모르겠다-8%, 8%</p>

번 항목에서 ‘아니다’와 ‘모르겠다’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질문)	
11.당신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민주의원-49%, 51% 민전-33%, 27% 모르겠다-18%, 22%

출처: 군사실문서철 Box.34 “Statistical analysis of political trends in Seoul”

여론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이었지만, 사실상 이 여론조사는 서울시민들에게 선거의 개최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구성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첫 번째 항목에서 “당신은 한국이 미래에 어떤 종류의 정부를 가질 것인지 관심이 있는가?”를 물으면서, 이하의 조사내용이 미래 한국정부 수립과 관련된 것임을 알렸다. 이후 세 번째 항목에서 선거 시의 정당 지지도를 물으면서, 정부수립을 위한 선거 개최 가능성을 암시했다. 9번, 10번 항목에서는 선거권의 제한 문제를 다루면서, 완전한 보통선거가 아닌 방식의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드러냈다. 선거권의 대상범위를 적절히 제한하는 것은 미군정이 원하는 선거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였다.⁷⁰⁾

이 여론조사에서 핵심 항목은 5번이었는데, 미군정의 민주의원 구상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성되었다. 민주의원을 그대로 정부로 인정하거나, 미군정이 선거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민주의원이 선거를 개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거를 통하여 과도정부를 수립하되, 민주의원으로 하여금 핵심적인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는 구상이 투영되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민주의원은 우익계 반탁세력만이 결집한 자문기구였고, 따라서 남한정계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는 조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선거권의 제한과 관련된 부분은 1946년 7월의 여론조사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었다. 연령, 문맹 등에 따른 선거권 제한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따라서 선거권 제한문제는 과도입법위원회에서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서는, 박찬표, 1996 <제한국회 선거법과 한국의 국가형성> 《한국정치학회보 29집 3호》 한국정치학회 참고.

하고 미군정은 마치 민주위원이 남한임시정부를 맡을만한 대표성을 가진 기구이거나, 선거를 개최하여 남한정부를 세울 권한을 대행할만한 기구인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이 여론조사가 시행된 시기는 1차 미소공위가 막 시작하려고 할 때였다. 그러나 5번 항목의 응답지를 볼 수 있듯이, 미군정은 미소공위 협상과 관련된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배제했다. 미소공위의 향후 결과물과는 상관없이, 과도정부 구상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 여론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미군정 여론과의 관리도 인정했듯이, 위의 여론조사 결과는 우익 편향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었다.⁷¹⁾ 정당 지지도나 지도자 지지도, 민주위원 지지도에서 우익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정당후보지지는 한민당, 국민당 등 우익계 정당지지가 각각 43%, 40%가 나왔고(좌익계 33%, 31%), 지도자에 대한 지지도는 김구·이승만·김규식 등 우익지도자들이 72%와 70%를 얻었다(박헌영, 여운형, 김일성, 김두봉은 총 28%, 30%).⁷²⁾ 민주위원과 민전의 지지도를 묻는 11번 항목에서는 민주위원 지지도가 49%, 51%로, 민전 지지도 33%와 27%에 비해 꽤 높은 편이었다. 우익에 대한 지지도가 40% 이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우익 성향의 응답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핵심문항에 대한 응답은 미군정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다. 위의 표7에서 볼 수 있듯이, 5번 항목에서 '미소양군 철수'를 지지하는 비율이 각각 49%와 55%로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에 민주위원의 정부화에 대한 지지율은 12%와 8%, 민주위원을 통한 선거개최는 19%와 13%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위원을 매개로 한 과도정부 수립보다는, 미소양군이 철수하고

71) 이 여론조사 보고서의 작성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매우 우익 편향적임을 지적하는 한편, 군정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RG332 Box.34 "Statistical analysis of political trends in Seoul"

72) 지도자별로 지지율을 보면, 이승만이 32%와 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김구가 22%와 20%, 여운형 13%와 15%, 박헌영이 10%와 11%였다. 그 밖의 지도자들은 한 자리 수 지지율에 그쳤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정부수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음이 드러났다.

미군정은 민주위원을 매개로 한 과도정부 구상에 한국인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지만, 과도정부 구상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1차 미소공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미군정은 미소공위와 관련된 여론조사들을 시행했다. 이들 여론조사에는 미소공위에 대한 미군정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1차 미소공위에서 양측의 협상이 난관에 부딪친 것은 ‘정당·사회단체와의 협상’ 부분이었다. 모스크바 결정대로 미소공위가 정당·사회단체와 직접협의를 통해 한국정부를 수립할 경우, 조직과 활동력이 우세한 좌익 측이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었다.⁷³⁾ 따라서 미국 측은 협의대표기구를 통한 협상을 주장했고, 앞서 보았듯 남한 측 협의 대표기구는 반탁단체가 집결한 민주위원이었다. 이러한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소련 측은 모스크바 결정에서 합의한 대로 정당·사회단체와 직접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오히려 반탁단체들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⁷⁴⁾

진전 없는 회담을 이어가던 중, 4월 5일 소련 대표단은 과거 반탁운동을 했더라도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면 협의대상 단체로 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소련 측의 제안과 이어진 양측의 협상을 통해, 4월 18일 미소공위는 공동성명 5호를 내어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한국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다.

미군정은 이 시점에서 공동성명 5호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1946년 4월 19에서 20일 사이 서울에서 33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여론조사의 제목은 “미소공위에서 발표한 공동성명 5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었다.⁷⁵⁾

73) 정용욱, 앞의 책, 212쪽.

74) 이하 1차 미소공동위원회회의 경과와 관련하여, 정용욱, 앞의 책, 222~231쪽.

75) 군사실문서철 Box.33 “Public reaction to the Communique #5 issued by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표 9 “미소공위 공동성명 5호에 대한 대중의 반응” 여론조사 항목과 응답률

문항 별 질문	응답지(응답률)
1.미소공위가 발표한 공동성명5호에 대해, 당신의 전반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a.찬성-123명(37%) b.반대-117명(35%) c.모르겠다-92명(28%)
2.반대한다면, 왜?	피뢰정부가 설립될 수 있다, 신탁통치를 원하지 않는다 등 다양한 주관식 답변들.
3.당신은 공동성명을 _____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a.미국과 소련에 의한 장기간의 신탁통치-64명(19%) b.미국과 소련에 의한 단기간의 감독-268명(81%)
4.당신은 한국정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믿는가?	a.인민들이 참여한 투표에 의해서-273명(83%) b.미소공위의 임명에 의해서-59명(17%)
5.당신은 그러한 선거가 언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4번 항목에서 a선택시)	a.즉각(북쪽에서는 러시아인들이 감독, 남쪽에서는 미국인들이 감독)-56명(25%) b.미소공위 감독 하에 38선이 제거되고 국가가 통일된 후 즉각-99명(33%) c.38선이 제거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118명(42%)
6.당신은 지난 12월 모스크바 회담의 결정(신탁통치 가능성이 포함하여)을 지지하는 정당들만 협의해야 한다고 믿는가?	그렇다-43(13%) 아니다-257(77%) 모르겠다-32(10%)
7.당신은 미소공위의 결정들을 따르는데 동의한 정당들만이 한국정부를 설립하는데 협의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128(39%) 아니다-170(51%) 모르겠다-34(10%)

출처: 군사실문서철 Box.33 “Public reaction to the Communique #5 issued by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1번 항목에서 공동성명 5호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찬반은 거의 반

반에 가까운 37% 대 35%였다. ‘모르겠다’라는 답이 28%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공동성명 5호에 대한 뚜렷한 여론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론조사 자체가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

그런데 2번 항목에서 미군정은 곧바로 ‘왜 반대하는가’의 이유만을 질문했다. 마치 반대여론이 다수를 차지할 것을 예상한 듯한 질문배치였다. 나아가 3번 항목에서는 공동성명 5호가 ‘장기간의 신탁통치’일 수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4번 항목은 공동성명 5호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다. 4번 “당신은 한국정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믿는가?”에서, 응답지는 ‘인민의 투표(선거)’와 ‘미소공위 임명’의 두 가지만이 주어졌다. 남한 사회의 독립열기와 정치참여 열기를 감안해봤을 때, 이 항목은 노골적으로 선거 쪽으로 여론이 쏠리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원래 공동성명 5호와 그에 따른 임시정부 수립은 한국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와 미소공위가 협의하여 이뤄지는 것이었지만, 미군정은 ‘미소공위 임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미소공위가 일방적으로 지도자들을 선택할 것처럼 묘사했다.

마지막 6번과 7번 항목은 소련 측의 입장을 공격하기 위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소련 측이 협의 대상을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이끌어내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6번 항목에서는 ‘모스크바 회담의 결정’ 뒤에 괄호를 치고 “신탁통치 가능성을 포함하여”라는 말을 집어넣어,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지지가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것일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당시의 반탁감정을 건드려서, 소련 측의 입장을 비판하는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였다.

이 여론조사는 미소공위에 임하는 미군정의 입장을 명확히 반영했다. 미군정은 미소공위에서 공동성명 5호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합의한 공동성명 5호의 의의를 평가절하하고 동시에 기존의 과도정부 구상을 계속 추진하려는 태도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인

들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했다.

미소공위 여론조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미군정이 의도한 방향으로 나왔다. 위에서도 한국인 지도자는 미소공위의 임명이 아닌 선거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결과(지지율 83%)가 나오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단체도 미소공위 협의대상이 되어야 한다(지지율 77%)는 결과가 나왔다.

미군정이 시행한 다른 미소공위 여론조사도 유사한 목적으로 항목이 구성되었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미소공위의 실패책임을 소련에 돌리는 미군정의 입장을 반영하여 항목을 구성했고, 여기에 호응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표 10 “미소공위 휴회 뉴스에 대한 반응” 여론조사 항목과 응답률

문항 별 질문	응답지(응답률-1차 여론조사/2차 여론조사)
1.당신은 미소공위의 휴회에 대한 뉴스를 들어보았나?	a.그렇다-253명(67%)/840명(99.4%) b.아니다-123명(33%)/6명(0.6%)
2.당신이 생각하기에 누가 휴회에 주로 책임이 있는가?	a.미국-6명(2%)/13명(1.6%) b.소련-275명(73%)/591명(69.6%) c.양자 모두-56명(15%)/107명(13.3%) d.둘 다 아니다-0명(0%)/116명(12.6%) e.모르겠다-39명(10%)/13명(2.9%)
3.당신은 소련이 한국정부의 설립에 있어 한국정당들의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를 부정했다는 죄가 있다고 믿는가?	a.그렇다-244명(65%)/717명(84.6%) b.아니다-17명(5%)/100명(11.8%) c.모르겠다-115명(30%)/23명(3.8%)
4.당신은 이러한 사건전개가 한국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주관식 답변-38선이 영구적인 국경이 될 것이다, 남한정부가 별도로 설립될 것이다/정치가들이 반성하고 좌우 정당이 통일될 것이다 등.
5.당신은 미국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a.남한 정부를 설립-227명(60%)/428명(54%) b.군정을 계속-78명(21%)/395명(43.8%)

	c.남한에서 모든 군대를 즉각 철수-32명(9%)/10명(1.2%)
	d.모르겠다-39명(10%)/7명(1%)

출처: 군사실문서철 Box.33, Box44 “Reaction to the news of adjournment of the Joint Commission”

미소공위 휴회 직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휴회 책임론을 적극 거론했다. 2번 항목에서 휴회 책임이 미국과 소련 가운데 어느 쪽에 있는가를 질문했으며, 3번에서는 소련 측이 주장한 협의단체 제한(반탁단체 제외)을 비난했다. 특히 3번 문항에서는 협의단체 제한문제를 각 정당들의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로 치환시켜서, 소련 측이 한국정당들의 발언권을 부정한 것처럼 공격했다.⁷⁶⁾

5번 항목은 미군정의 정치구상에 대한 반응을 다시 한 번 점검한 것으로, 미소공위 휴회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서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 여론조사를 통해 미군정은 미소 양군 철수/과도정부 수립/정부수립 보류에 대해 질문한 바 있었다. 이번에는 ‘민주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했다는 점이 달랐다.

미소공위 휴회 여론조사에 나타난 서울주민들의 여론 또한 공동성명 5호 여론조사와 같이 미군정이 원하는 결과였다. 미소공위 휴회의 책임이 소련 측에 있다는 결과가 각각 73%, 69.6%가 나왔으며, 소련 측이 한국정당의 발언권을 부정한 죄가 있다는 의견도 65%와 84.6%였다.

무엇보다도 미소공위 휴회와 미소 간의 대립구도는 철군과 관련하여 여론의 변화를 가져왔다. 앞서 검토했던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 여론조사에서는 강력한 미소 양군 철수여론이 감지되었고, 이는 미군정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미군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드러났기 때문이었

76) 하지는 5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소공위 휴회를 알리면서, 소련 측의 협의단체 제한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련 측이 반탁단체를 제외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근본인 의사발표권을 거부했다는 것이었다. 3번 문항은 하지의 기자회견 내용을 서울 주민들이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아일보》 1946년 5월 10일자.

다. 그런데 미소공위 휴회 여론조사에서는 철군을 주장하는 여론이 대폭 감소했다.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 여론조사에서 미소양군 철수 지지가 49%, 55%로 과반수에 달했던 반면, 미소공위 휴회 여론조사에서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불과 9%와 1.2%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남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고, 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비중은 크게 상승했다. “서울의 정치동향 통계분석”에서 남한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민주의원을 정부로 변경/미군정이 선거 개최/민주의원이 선거 개최)은 다 합쳐도 각각 37%, 26%에 그쳤다. 또 한국정부를 수립하지 않아야 한다(보류-군정 유지)는 입장은 14%, 19% 정도였다. 그러나 미소공위 휴회 여론조사에서 정부수립 지지는 60%와 54%로 과반수를 넘겼고, 군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도 21%와 43.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미소공위 휴회를 계기로 서울의 여론추이가 변화했고, 따라서 과도정부 구상을 밀고 나갈 기회가 생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결과였다.

이처럼 미군정은 미소공위를 통한 분단문제 해결보다는 과도정부 구상을 추진하기를 원했고, 미소공위에 대해서는 소련 측의 입장을 비난하는데 주력했다. 미소공위가 결렬된 것을 계기로 하여, 미군정은 새로운 과도정부 구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⁷⁷⁾ 한국인 정치기구를 설립하고, 한국인의 군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미군정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한국인 정치기구는 입법기구의 형태로 결정되었고, 미군정은 대규모 여론조사를 통해 재차 한국인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1946년 7월 미군정은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Type and Structure of a Future Korean Government)”⁷⁸⁾라는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서울 시내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총 2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항목이 많았기 때문에 설문지를 나눠준 후 수거하

77) 미국·미군정의 입법의원 설치와 과도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정용욱, 앞의 책, 235~246쪽 참고.

78) 원문은 신복룡 편, 1993 《한국분단사 자료집》 6 원주문화사, 7~42쪽. 이 여론조사의 1번에서 7번 항목의 질문과 응답률은 동아일보에도 실렸다.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은 응답률이 약간 틀린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자.

는 방식으로 진행했다.⁷⁹⁾ 따라서 설문지 수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설문지가 누락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다. 또 미군정에 협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일도 일어날 수 있었다.⁸⁰⁾ 실제 10000장의 설문지 가운데 응답과 함께 돌아온 것은 8476명분이었다. 8476명 가운데 우익은 2497명, 좌익은 1402명, 중립(Neutrals)은 4577명으로, 우익이 좌익보다 1100명가량 많았다.⁸¹⁾

이 여론조사는 ‘미래의 한국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과도정부 구상과 그에 따른 입법의원 설치 문제를 제기한 여론조사였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거 실시와 입법기구 설치에 맞춰져 있었다.

표 11. 미래 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 여론조사 주요 항목과 응답률

문항 별 질문	응답지-응답률
2.당신이 선호하는 일반적 정치형태는 어느 것인가?	개인독재(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3% 數人독재(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4% 계급독재(다른 계급의 의지와 상관없이)-5% 모든 사람들에 의해 지배하는 대의정치-85% 모르겠다-3%
3.당신은 어떤 것을 선호하는가?	자본주의-13% 사회주의-70% 공산주의-10% 모르겠다-7%
4.당신은 한국정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 시민의 의무,	그렇다-87% 아니다-3%

79) 현재까지 남아 있는 미군정 여론조사 자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내용은 매우 간단했다. 앞서 토지개혁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별 여론조사의 항목은 3개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원이 응답자에게 질문을 하고, 응답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80) 미군정은 사라진 설문지의 일부가 협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수거된 설문지 가운데 일부는 답변 없이 붉은 글씨로 좌익 구호만 적어놓은 것도 있었다.

81) 퍼센트로 계산하면 우익이 29.46%, 좌익이 16.54%, 중립이 54%였다.

그리고 정부의 의무와 구조를 정의하는 성문헌법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믿는가?	모르겠다-10%
5.만약 '예'라면, 이 헌법 작성시기는 언제여야 하는가?	지금-22% 한국이 통일 되었을 때-71% 모르겠다-7%
6.누가 그러한 헌법을 작성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선출한 민선헌법회의-70% 주요 정당들이 고른 헌법위원회-13% 미소공위에 의해 선택된 헌법위원회-7% 미군정에 의해 선택된 헌법위원회-2% 미소공위-2% 미군정-1% 모르겠다-5%
7.당신은 이 헌법이 조선의 최고법이 되기 전, 누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작성한 그룹-13.5% 한국사람들에 의한 일반투표-79% 미소공위-3% 모르겠다-4.5%
8.다음의 경제적 권력과 권한 가운데 어떤 것을 한국정부가 가져야 하는가?	모든 농지의 소유/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양의 제한/모든 대규모 산업의 소유/모든 경제활동의 통제/모든 생산수단의 소유 (이하 생략. 응답률 생략)
16.한국정부가 수립된 후, 일본인들이 소유했던 토지들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	정부의 손에 보유-36% 소작농에게 판매-30% 소작농에게 분배-31% 모르겠다-3%
17.한국정부가 수립된 후, 한국인 대지주들이 소유했던 토지들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가?	현재 소유자의 손에 남아있도록 허락-12% 각 지주는 특정한 양의 토지를 제한받고, 나머지는 정부에 적당한 가격에 판매-48% 각 지주는 특정한 양의 토지를 제한받고, 나머지는 정부에 의해 압수-22% 모르겠다-3%
18.당신은 현재 남한에서(강	그렇다-45%

조-원문) 의회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가?	아니다-40% 모르겠다-15%
19.당신은 어떻게 남한의 임시(강조-원문) 의회 의원들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믿는가?	주요 정당들에 의해서 임명-11% 사람들에 의해 선출-64% 군정이 선택-7% 모르겠다-18%
20.당신은 한국독립의 대의 명분이 그러한 의회의 설립으로 도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51% 아니다-28% 모르겠다-21%
21.당신은 남한의 임시 대통령(Provisional Korean President)이 어떻게 선택되어야 한다고 믿는가?	의회에 의해서 선택-10%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선출-68% 군정에 의해 임명-4% 모르겠다-18%
24.당신은 투표하도록 허용되는 나이가 얼마여야 한다고 믿는가?	15~25세 사이 중 선택(응답 생략)
27.당신은 어느 것을 지지하는가?	민주의원-26% (김구의) 임정-13.3% 민전-16.4% 북한 임시인민위원회-1.3% (이승만의) 독촉-11% 이 가운데 없음-32%

출처: 신복룡 편, 1993 《한국분단사자료집》 6 원주문화사.(원전: RG407 Box.2074 “Type and Structure of a Future Korean Government”

*밑줄 친 부분은 원문 강조

이 여론조사는 헌법작성, 대통령 선출, 경제체제 선호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시의성을 가진 질문은 입법의원 설치문제와 관련된 18, 19, 20번뿐이었다. 18번에서는 한국인 입법기구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묻고, 19번에서는 의원 선출방법(선거, 군정임명, 주요정당 임명)에 대해서, 그리고 20번에서는 18번 문항의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했다.

18번 항목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입법기구 설치에 대한 의견은 45% 대 40%(모르겠다 15%)로 찬성이 약간 더 높았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20번 항목을 통해 교묘하게 질문을 다시 반복했다. 의회설립이 ‘한국독립의 대의명분’을 도울 것이라고 믿느냐고 물음으로써, 실제 의회가 설립될 경우 독립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 결과 ‘그렇다’가 51%로, ‘아니다’의 28%를 압도하는 수치가 나왔다. 동일한 문제에 대한 질문임에도, 문구의 수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예였다. 문구수정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준 20번 문항의 결과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의원 여론조사에 대한 서울 주민의 반응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에 가깝되, 찬성 쪽의 입장이 약간 더 높았다. 또 이 여론조사도 민주의원 여론조사처럼 우익성향의 응답자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높지 않은 지지율이었다.⁸²⁾ 입법의원 설치에 대한 서울 주민의 여론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입법의원 설치에 대한 찬반은 정치성향에 따라 갈리는 경향이 있었다.⁸³⁾ 위의 여론조사에서 스스로를 우익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의 경우에는 찬성이 66%, 반대가 24%였던 반면, 좌익 성향의 응답자는 찬성이 20%, 반대가 69%였다. 중립 성향은 찬성이 42%, 반대가 40%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의 입장에서 입법의원 여론조사의 결과는 민주의원 여론조사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 민주의원을 매개로 한 과도정부

82) 27번 항목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론조사의 응답자 가운데 50.3%가 우익계 조직인 민주의원, 임정, 독촉의 지지자였다. 반면 좌익계 민전과 북한 임시인민위원회를 지지하는 비율은 17.7%에 불과했다. 제시된 정당·단체 가운데 지지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자는 32%였다. 여론조사 응답자의 성향을 질문했을 때 응답자들이 스스로 밝힌 정치성향에 따르면 우익은 29.46%, 좌익은 16.54%, 중립이 54%였다. 그러나 정당·단체 지지율을 보면 우익이 50.3%를 차지했다. 스스로를 중립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들 가운데 우익단체를 지지하는 비율이 꽤 높았다.

83) 7월 초 미군정이 입법기구 설치안을 언급했을 때, 민전은 즉각 입법기구 설치를 반대했다. 여운형 등 좌익 대부분도 반대의사를 냈다. 당시 한민당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좌익계 전반의 반대와 우익 일부의 찬성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병준, 1993 <1946~1947년 좌우합작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 《한국사론》 2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54쪽.

구상은 우익에게조차 별다른 지지를 얻지 못했지만, 입법의원 설치에 대해서는 우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율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미소공위·민주의원·입법의원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미군정의 입장과 한국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군정은 신탁통치안에 따라 미소공위를 기반으로 남북의 분단을 해결하기 보다는, 과도정부 수립 구상을 계속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졌다. 그에 따라 민주의원·미소공위·입법의원 여론조사에서 모두 일관되게 선거를 통한 과도정부 구상을 지지하는 여론을 얻어내고자 했다. 미군정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항목구성이었으므로, 객관적인 여론을 알기는 어려운 여론조사 구성이었다. 그러나 어차피 미군정이 원하는 것은 미군정의 입장이 한국인들에게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였으므로, 여론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여론을 얻을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미소공위·민주의원·입법의원 여론조사의 항목 가운데 일부는 미군정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설득시키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미군정의 정치관련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전반적인 한국인 여론의 흐름은 미군정이 원하는 방향이었다. 민주의원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한국인들은 민주의원을 매개로 한 과도정부 수립에 대해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미소양군 철수를 요구하는 여론이 거셌다. 그러나 1차 미소공위에서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미소 간의 대립구도로 흘러가자, 미소양군 철수 여론은 잦아들었다. 또 미소공위 결렬의 책임에 대해, 소련을 비난하는 여론의 흐름이 이어졌다.

입법의원 여론조사의 결과도 민주의원에 비하면 긍정적이었다. 입법의원 설치에 대한 서울의 여론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했지만, 어쨌거나 찬성이 반대보다 5% 높았다. 미군정이 선거를 통한 입법의원 설치를 밀어붙일 수 있을만한 여론조사 결과였다. 남은 문제는 선거를 어떤 방식으로 언제 시행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미군정의 정치 여론조사에서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선거권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미군정은 선거권의 제한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

한을 가해야 할지 여러 측면에서 질문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보통선거권을 원하는 것이었다.

표 12 민주의원·입법의원 여론조사에서 선거권 관련 항목과 응답률

질문	응답지-응답률(민주의원은 2차례 여론조사)
9.만약 선거가 치러진다면, 성인이고, 분별있고, 법을 지키는 모든 시민에게 투표가 허가되어야 하는가?	그렇다-66%/65% 아니다-27%/29% 모르겠다-7%/6%
10.만약 선거가 치러진다면, 성인이고, 분별 있고, 법을 지키는 시민이면서 한국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이들만 투표가 허가되어야 하는가? (9번 항목에서 ‘아니다’ ‘모르겠다’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질문)	그렇다-86%/87% 아니다-6%/5% 모르겠다-8%/8%
22.당신은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만이 투표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는가?	그렇다-37% 아니다-52% 모르겠다-11%
23.당신은 남자와 여자 모두 투표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는가?	그렇다-71% 아니다-25% 모르겠다-4%
24.당신은 투표하도록 허용되는 나이가 얼마여야 한다고 믿는가?	15~25세 사이 중 선택(20세가 30.5%가 최다, 이후 25세가 23%, 21세가 17%, 18세가 14%로 높은 응답율.)
25.당신은 자산을 소유하거나 세금을 내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는가?	그렇다-20% 아니다-73% 모르겠다-7%

출처: 군사실문서철 Box.34 “Statistical analysis of political trends in Seoul” ; 신복룡 편, 1993 《한국분단사자료집》 6 원주문화사.(원전: RG407 Box.2074

표11에서 앞의 9, 10번 항목은 민주의원 여론조사에서, 나머지는 입법의원 여론조사에서 나온 항목들이다. 전반적으로 선거권의 제한에 반대하고, 보통선거가 실시되기를 원하는 여론이 강했음이 드러난다. 22번 문맹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만 37%의 비교적 높은 찬성이 나타났으나, 반대는 52%로 과반수가 넘었다. 또 남녀 모두 투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71%, 자산소유나 납세여부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73%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 선거연령도 20세와 21세의 응답률이 합쳐서 47.5%로, 비교적 낮은 쪽에 많은 지지가 몰렸다.

대부분의 선거권 제한에 반대하는 여론이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이 진행한 입법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되었다. 세대주만이 투표할 수 있었고, 따라서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여성과 납세를 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⁸⁴⁾ 미군정의 의도는 실제 선거결과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선거방식과 선거시기의 유리함과 함께, 지방군정관리와 경찰력의 부분적인 지원을 얻은 우익이 입법의원 선거를 압도적으로 승리했다.⁸⁵⁾

미군정의 선거권 제한과 경찰개입으로 인한 우익의 선거 승리는 좌익·중간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중간파는 서울·강원지역의 재선거를 요구했다. 미군정은 서울지역의 재선거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 서울지역의 여론을 조사했는데, 서울의 여론은 선거 취소와 재선거를 지지했다. 서울지역에서 시행된 특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서울선거의 취소와 재선거를 지지했으며, 반대는 27%, 모르겠다는 24%였다.⁸⁶⁾ 우익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서울지역의 여론조사였지만, 부정확한 선거에

84) 김영미, 앞의 글, 265~268쪽.

85) 당선된 민선의원은 한민당 14명, 독촉국민회 17명, 한독당 3명, 인민위원회 2명, 무소속 9명이었다. 제주도에서 당선된 인민위원회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우익이었다. 김영미, 앞의 글, 269~272쪽.

86) 《여론동향》 31호(1947.1.1.)

대해서는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상 3장에서 살펴본 바, 서울지역의 여론은 미군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음을 알 수 있다. 1946년 3월 미소 양군 철수를 선호하고 미군정의 민주의원 구상에 반대하던 여론의 추이가 미소공위 결렬을 거쳐 입법의원 구상을 찬성하는 것으로 돌아섰다. 또 미소공위 결렬에 따른 책임을 소련 측에 두는 여론이 강했다.

한편으로 선거권에 대해서는 보통선거권이 주어지길 희망하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를 원하는 여론도 존재했다. 입법의원 선거가 선거권 제한과 경찰·관리의 부정개입으로 인해 왜곡되었을 때, 서울지역의 주민들은 재선거를 지지했다. 서울의 주민들은 미군정의 입법의원 선거에 찬성했으나, 부정한 선거는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미군정이 시행한 여론조사 활동을 분석하고,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는 당시 남한의 정치·사회동향을 정리했다.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군정의 여론조사 활동은 공보기구 산하의 하부부서를 통해서 시행되었다. 여론처에서 여론국으로 명칭이 변화한 여론조사 기구는 여론수집여행과 가두조사의 두 가지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여론수집여행은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시행되기 전 소수의 미군장교들이 지역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이었고, 초창기 예비조사의 성격이었다. 전국적으로 도시·도회지에서 여론조사원이 고용되면서 가두조사 방식으로 본격적인 여론조사가 시행되었다. 이때부터는 질문지와 응답지를 준비하여 거리의 행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가두조사로 시행된 여론조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론수집여행에 비해 발전된 형태였다.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치를 내는 것이 가능했고, 같은 주제를 반복함으로써 시기에 따라 통계치가 변화하는 것을 추적할 수도 있었다.

가두조사로 행해진 여론조사는 그 목적과 시행주기에 따라 정기/비정기 여론조사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 여론조사는 특정 설문을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시행했는데, 여론의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생상황, 미군정 및 군정 정책에 대한 만족도, 경제체제 선호도가 주된 주제였다. 비정기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시행한 배경조사와, 중요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실시한 현안조사의 두 가지가 있었다. 현안조사는 단순히 정치적 사안에 대한 여론을 수집한다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미군정의 입장이 일정하게 반영되었다.

정기 여론조사와 비정기 여론조사는 그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항목설정도 달랐다. 정기 여론조사는 미군정의 점령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지표를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여론조사의 항목설정도 단순한 편이었다. 반면 비정기 여론조사, 그 가운데에서도 현안조사는 미군정의 정치구상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미군정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항목들이 섞여있었다. 따라서 여론조사 항목이 객관적인 여론을 확인하기에 부적합한 것들이 있었다. 미군정이 추구하는 것은 미군정의 주관적 입장에 대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지지를 얻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으므로, 객관적인 여론을 얻기 위한 항목구성이 필요하지 않았다.

정기 여론조사와 비정기 여론조사는 시행방식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시행지역도 달랐다. 정기 여론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비정기 여론조사는 서울지역만 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다. 미군정의 입장에서 서울과 지방을 분리하여 사고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정치의 중심지이자, 모든 여론조사가 시행되는 핵심지역이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점령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 여론조사만 시행되었다.

미군정의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당시의 사회동향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식량위기와 그에 따른 도시지역의 불만 확산이었다. 식량위기와 그에 따른 미가의 급락은 ‘미군정에 대한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인들이 미군정의 행정력에 불신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군정이 서울을 정치 중심지로 중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도시지역의 식량위기는 미군정에 있어 상당한 위기였다.

두 번째는 국가주도의 경제통제와 토지개혁,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한국인들의 지지였다. 한국인들은 주요산업 또는 모든 산업의 국유화를 선호했고, 정부가 다양한 방면의 경제통제를 가하는 것을 지지했다. 귀속농지와 한국인대지주농지에 대해 토지개혁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했는데, 미군정 주도의 조치에는 반대했다. 토지개혁은 미래의 한국정부가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한국인들은 노조의 정치활동에 반감을 보였으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지했다. 한국인들이 원하는 노동조건은 북한의 노동법이 제시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

었다.

미군정의 여론조사는 1946년 정치동향의 흐름 또한 보여주었다. 미군정은 미소공위를 기반으로 한 해결보다는 과도정부 수립구상을 계속 추진하는데 관심을 가졌고, 여론조사로 이에 대한 한국인의 반응을 살폈다. 서울 지역에 한정된 반응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한국인 여론의 흐름은 미군정이 원하는 방향이었다. 한국인들은 1946년 3월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미군정의 민주의원 구상을 반대했고, 오히려 미소양군 철수를 지지하는 여론을 드러냈다. 그러나 1차 미소공위 결렬 이후 미군정의 입법의원에는 찬성하는 방향으로 여론의 흐름이 변했고, 미소공위 결렬에 대해서도 소련 측에 책임을 두는 경향이 강했다.

서울지역의 한국인들은 입법의원 수립에 찬성했으나, 미군정이 입법 의원을 수립한 방식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들은 성별이나 재산에 따른 제한이 없는 보통선거권이 주어지길 희망했으나, 미군정은 우익의 승리를 위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경찰과 관리의 선거개입을 묵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국인들은 서울지역에서 시행된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시행하는 것을 지지했다.

이상에서 본고는 미군정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당시의 정치동향과 사회동향을 부분적으로 밝혀냈다. 미군정 여론조사 시행방식과 목적, 시행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했다. 또 여론조사 자료를 좀 더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기존 여론조사연구에서 다루지지 않은 정치동향과 사회동향을 밝혀냈다.

그러나 미군정기 정치동향과 사회동향을 더욱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를 더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군정의 여론조사와 실제 정책과의 상관관계, 공보활동과의 연관성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RG332 군사실문서철 여론조사 관련 자료

신복룡 편, 1993 《한국분단사 자료집》 6 원주문화사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시민소요·여론조사보고서 1945.9-1948.6》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5 《미군정기 정보자료집: 노동관련 보고서 1945.9-1950.4》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주한미군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경제연보 1948》

1988-89 《주한미군정보부일지(HQ, USAFIK G-2 Periodic Report)》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 단행본

강미은, 1997 《여론조사 뒤집기》 개마고원

에드워드 버네이스, 2009 《프로파간다》 공존

정용욱, 2003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출판부

마크 게인, 1986 《해방과 미군정》 까치

프랭크 뉴포트, 2004 《여론조사》 휴먼비즈니스

3. 연구논문

김보미, 2012 〈미군정기 여론조사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 김영미, 1994 〈미군정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성립과 활동〉 《한국사론》 3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김학재, 2011 〈정부수립 전후 공보부·처의 활동과 냉전 통치성의 계보〉 《대동문화연구》 74 대동문화연구원
- 김한샘, 1997 〈미군정기 귀속농지 불하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수현, 2009 〈미 군정 공보기구 조직의 변천(1945.8-1948.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찬표, 1996 〈제헌국회 선거법과 한국의 국가형성〉 《한국정치학회보》 29집 3호 한국정치학회
- 부미선, 2002 〈1945~46년 미군정의 미곡시장 자유정책〉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신병식, 1992 《한국의 토지개혁에 관한 정치경제적 연구》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성근, 1985 〈해방직후 미군정치하의 여론동향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25 한국정치학회보
- 이철수, 1995 〈북한의 노동법〉 《통일문제연구》 24 평화문제연구소
- 장영민, 2001 〈미군정기 미국의 대한선전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16 한국근현대사학회
- 장영민, 2007 〈미국공보원의 5.10총선거 선전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41 한국근현대사학회
- 전상인, 1997 〈1946년경 남한 주민의 사회 의식〉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 정다운, 2006 〈주한미군의 선전활동과 농민주보〉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 정병준, 1993 〈1946~1947년 좌우합작운동의 전개과정과 성격변화〉 《한국사론》 29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차재영, 1994 〈주한 미점령군의 선전활동 연구〉 《언론과 사회》 5 언론

과사회사

최영목, 1996 <미군정의 식량생산과 수급정책> 《역사와 현실》 22 한국
역사연구회

최영목, 2008 <미군정기 서울시 식량 배급의 실제> 《향토서울》 71 서
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함한희, 1998 <미군정의 농지개혁과 한국 농민의 대응> 《한국문화인류
학》 31 한국문화인류학회.

황윤희, 2010 <번스(Arthur C. Bunce)의 내한활동과 한국문제인식>
《숭실사학23》

【Abstract】

A View of South Korea's Political and Social
Trends Through USAMGIK's Opinion
Surveys(1945~1947)

Song, Jae-Gyoung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South Korea's political and social trends through analyzing of US army government's opinion surveys during 1945-1947.

After occupation of South Korea, USAMGIK(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had to face political, economic, social problem of South Korea. Economic problem was rising due to cutting of trade with Manchuria, North Korea and Japan, and feudalistic tenant system was still prevailing. South Korean wanted mother nation's unconditional independence, and was seeking reforms such as land reform.

At the same time, USAMGIK had to carry out mission of

accomplishing US's interest in Korea peninsula. USAMGIK influenced South Korea's political realignment, and pushed forward concept of Korean interim government to promote core political group of future Korean government. Because election was important medium in USAMGIK's concept of Korean interim government, it was important to secure support of South Korean.

USAMGIK's opinion survey was to find solutions for both matters. USAMGIK inspected any social problems which might threaten the stability of occupation and checked Korean's reaction to its political program through opinion survey. Consequently, USAMGIK's opinion surveys contained social trends and political trends of South Korea during occupation.

USAMGIK's opinion survey was conducted by sub-section of public information organization. While changing its name from Office of Public Opinion to Public Opinion Bureau, this section carried out opinion polls by means of Opinion Sampling Trip and On the Street Survey. Opinion Sampling Trip was method of conducting interviews with several local residents by army officers, and it was a preliminary study before beginning opinion surveys.

After employment of polltaker through out cities and towns of each provinces, opinion survey activity could be conducted by means of On the Street Survey. From that time, prepared questionnaire was used in surveying activity. It was possible to do quantitative surveys, and track down the trends of public opinion. But On the Street Survey had weaknesses because it was not a scientific sampling of public opinion. In fact, in Seoul area, right wings' opinion could be exaggerated in survey results, due to left wings' refusal to respond USAMGIK's opinion polls. This is one of the factor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analyzing USAMGIK's poll results.

USAMGIK conducted regular opinion polls and occasional polls. Regular opinion polls was done regularly to check variation of certain opinion trends. Problems concerning livelihood of people, satisfaction of USAMGIK and USAMGIK's policy, preference of economic system were main subject of regular opinion poll. Occasional opinion polls could be divided by background survey of Korean society and issue survey of political matters. In issue survey, USAMGIK included questions of its political plans.

USAMGIK conduct both regular polls and occasional polls in Seoul, but only regular polls in provinces. To USAMGIK, Seoul was an important political center. On the other hand, USAMGIK conducted only regular polls in provinces, which is concerned with stability of occupation only.

In USAMGIK's polls, two social trends can be analyzed. First thing is food crisis and prevailing dissatisfaction of city dwellers. Soaring of rice price had bad influence on 'satisfaction of USAMGIK', and was a cause of Korean's distrust on USAMGIK's administrative ability. For USAMGIK regarded Seoul as a important political center, this food crisis was a great threat to USAMGIK's occupation.

Secondary social trends were South Korean(city dwellers, especially Seoul)'s support of Government controlled economy, land reform and a better labor conditions. Korean favored nationalization of main industries or all industries, and supported governmental control of economy by various means. Also Koreans demanded land reform by future Korean government, but they did not favored USAMGIK's intervention. Most of Korean did not supported labor union's political activities, but they still wanted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USAMGIK's surveys also shows political trends of 1946. USAMGIK was interested in pushing interim government plan instead of trusteeship by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And they constantly surveyed South Korean's reaction to their plans. Though it's only limited to Seoul area, Korean's opinion trends slowly moved as USAMGIK desired. In 1946 march's opinion poll, Koreans were against USAMGIK's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 of South Korean. Instead, they insisted US and Soviet army's withdrawal. But after failure of 1st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Korean opinion supported USAMGIK's South Korea 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SKILA). Also Korean blamed Soviet for the recession of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Korean were agreeing to USAMGIK's plan of SKILA, but not the way USAMGIK establishes SKILA. Koreans demanded popular suffrage for the SKILA election in opinion polls, but USAMGIK limited suffrage in order that right wing wins the election. USAMGIK also connived police and Korean government employee's intervention of election. In Seoul, Koreans supported invalidation of election and reelection of representatives of their area.

Key-words : public opinion, opinion survey, US army military government, public information, political trends, social trends,
Student Number : 2010-20034